

발간등록번호

11-1613000-000325-01

연구용역보고서
2015-01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민간금융조달 촉진을 위한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활성화 세부실행방안 연구

2015. 11

연구기관

해외건설협회 • 법무법인 세종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발간등록번호

11-1613000-000325-01

연구용역보고서
2015-01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민간금융조달 촉진을 위한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활성화 세부실행방안 연구

2015. 11

연구기관

해외건설협회 • 법무법인 세종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제 출 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민간금융조달 추진을 위한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활성화 세부실행 방안 연구”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 12.

연구기관 : 해외건설협회, 법무법인 세종

■ 참여 연구진

법무법인 세종 이상현 책임연구원
김대식 책임연구원
최우진 연구원
김찬년 연구원
유나 연구원

해외건설협회 정창구 책임연구원
정종현 연구원
김효은 연구원

목 차

목 차	i
표 차 례	iv
그림차례	vi

제1장 해외건설 관련 펀드의 현황 및 시사점

1.1 특수 목적으로 설정된 펀드의 현황	1
1.1.1 특수 목적 펀드 설정 현황	1
1.1.2 특수 목적 펀드의 부진 및 그 원인	4
1.1.3 특수 목적 펀드의 성공 사례 및 그 시사점	8
1.2 국내 해외건설 관련 펀드의 현황과 부진 이유	16
1.2.1 해외건설 관련 펀드의 현황과 실제 투자 규모	16
1.2.2 해외건설 관련 펀드 형태의 투자가 부진한 이유	23
1.2.3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설정된 펀드의 한계	24
1.2.4 해외건설특화펀드의 도입과 그 한계	31
1.3 인프라펀드의 해외 사례 검토	34
1.3.1 세계 인프라 건설 수요와 투자 현황	34
1.3.2 호주의 인프라펀드	36
1.3.3 캐나다의 인프라펀드	39
1.3.4 영국 및 EU의 인프라 펀드	41
1.3.5 미국의 인프라펀드	44
1.3.6 해외 인프라펀드의 투자 특징 및 시사점	46
1.4 해외건설특화펀드의 도입 필요성	48
1.4.1 해외건설 관련 사업방식에 따른 금융투자 현황	48
1.4.2 건설산업의 구조개편 및 해외 진출	48

1.4.3 해외 SOC 사업을 통한 유무형의 이익	65
1.4.4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금융투자상품 개발	73
1.5 해외건설특화펀드의 기대 효과	79
1.5.1 풍부한 민간 유동자금 유입	79
1.5.2 자본수출 형태의 해외 진출 증가	83
1.5.3 해외건설 진출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	87

제2장 해외건설특화펀드 활성화를 위한 실행 방안

2.1 해외건설 관련 금융투자의 특성과 특수목적펀드의 성공요인과 비교 분석	90
2.2 모자형 펀드 구조 활용	92
2.2.1 공모해외건설특화펀드 자금모집의 바람직한 방식	92
2.2.2 해외건설특화펀드의 리스크 감소 방안	93
2.3 전문집합투자업자 설립 지원	96
2.3.1 전문집합투자업자 신설 필요성	96
2.3.2 전문집합투자업자 지원 필요성 및 지원 방안	199
2.4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	103
2.4.1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103
2.4.2 산업은행의 금융 지원	104
2.4.3 무역보험공사의 금융 지원	106
2.5 해외건설투자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108
2.6 주무관청과의 펀드설립 협의 절차 개선	109
2.7 금융기관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 개선	110
2.7.1 은행의 국내SOC 투자 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특례	110
2.7.2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111
2.8 조세특례의 부여	113

2.8.1 개인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	113
2.8.2 법인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	115

제3장 해촉법의 하위 규정 정비

3.1 해촉법 관련 훈령, 매뉴얼, 지침 등 정비	117
3.1.1 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117
3.2 해외건설특화펀드 승인 절차 검토	118
3.2.1 해외건설특화펀드의 설정	118
3.2.2 해외건설특화펀드의 승인 시 고려사항	120
3.3 해외건설특화펀드 설립을 위한 협의 절차 검토 ...	121
3.3.1 등록 또는 보고 시 사전 협의절차	121
3.3.2 영업보고서 제출 관련	122
3.4 해외건설특화펀드 운용역 교육 과정 검토	122
3.4.1 근거	122
3.4.2 목적 및 교육대상	123
3.4.3 교육기관	124
3.4.4 교육방법, 교육과정 및 이수기준 등	128
3.4.5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관리	130
3.4.6 기대효과	131
3.5 집합투자업자 인가 등 협의절차 검토	131

표 차 례

표 1. 특수 목적 펀드의 개요 및 현황	2
표 2. 2015년 국고보조금 집행계획(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5호)	10
표 3. 투자위험보증기관 모집공고 중 신청자격	12
표 4. 글로벌 인프라펀드 설정 현황(2015. 5. 기준)	16
표 5. 외화 인프라 펀드 설정 현황(2015. 5. 기준)	17
표 6. 글로벌 코퍼레이션펀드 설정 현황(2015. 5. 기준)	18
표 7. 최근 5개년 수주액	20
표 8. 주요 연금 인프라 투자 비중(2010)	35
표 9. 호주 상위 10개 연금 인프라 자산 비중(설정 기준)	38
표 10. 세계 인프라 펀드 중 호주 인프라 펀드 규모	39
표 11. 건설업의 성장률 추이	49
표 12. 법정관리 중 임금체불 발생사례	51
표 13. 법정관리 건설자 인력 구조조정 사례	52
표 14. 해외건설 인력증가 현황	57
표 15. 국가별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매출 현황	62
표 16.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진흥계획(2010~2014년) 주요과제	63
표 17. SERI-PCNB NBDO 국가브랜드 종합 순위	67
표 18. 한국 국가브랜드 저평가 이유 및 가치 제고 방안	68
표 19. 기준금리와 통화지표 추이	80
표 20. 금리와 은행 및 단기금융상품 수탁고 추이	81
표 21. 기준금리와 파생결합증권 월별발행현황	82
표 22. 파생결합증권 발행현황	82
표 23. 전년말 대비 연령계층별 고용률 현황	87
표 24. 투자자 유형	93
표 25. 일반집합투자업자와 전문집합투자업자의 비교	97

표 26. 특별자산 전문집합투자업자 현황	98
표 27.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인프라 위탁운용사 현황	101

그 립 차 례

그림 1. 중소기업창업지원 펀드 중 하나인 KT-미시간글로벌콘텐츠펀드의 창업투자회사투자현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	6
그림 2.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등록·관리 조합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7
그림 3. 산업통상자원부통계-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현황	9
그림 4. 최근 5년간 융자지원현황 (해외자원개발협회)	11
그림 5. 융자절차 (해외자원개발협회)	12
그림 6. 최근 6개년 국내 건설사 해외 수주현황(해외건설협회)	20
그림 7. 캐나다 연금 자산 비중 변화도-PIAC(2012)	40
그림 8. 신 주택보급률(연도별)	49
그림 9. 주요업종별 기업부도율	50
그림 10. 기업대출 및 건설부문 연체율 추이	50
그림 11. 세계 건설시장 규모 연도별 추이	55
그림 12. 해외건설 수주 현황	55
그림 13. 연도별 해외건설 수주 및 우리나라 인력진출 현황	57
그림 14. 대한민국 해외건설 지역별/공종별 수주현황	58
그림 15. 공종별 수주구조 비교	59
그림 16. 발주형태별 해외건설수주비중	60
그림 17. 해외 플랜트의 국산기자재 사용비율	61
그림 18. 해외건설사업의 인력구성	61
그림 19. 2005-2011년 글로벌 운용자산 규모(Strategic Insight, “Global Fund Review”(2011)	75
그림 20. CalPERs 인프라 투자규모 추이 (CalPERs Comprehensive Annual Financial Report)	76

그림 21. CPPIB 인프라 투자규모 추이(CPPIB Annual Report)	76
그림 22. Future fund 자산 배분 현황(2015. 3. 31. 현재)	77
그림 23. 월별 무역수지 추이	84
그림 24. 일본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 추이	85
그림 25. 우리나라 경상수지와 투자소득수지 추이	86
그림 26. 해외건설 수주액 및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추이	88
그림 27. 해외건설 수주액 및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추이(2년 레깅)	89
그림 28. 종류형 펀드 구조	94
그림 29. 모자형 혼합형 펀드 구조	96
그림 30. 국민연금의 연도별 해외대체투자금액 현황	100
그림 31.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구조도(해외자원개발협회)	103
그림 32. 자원개발사업 지원추이(해외자원개발협회)	104
그림 33. 산업은행의 금융지원 조직(해외자원개발협회)	105
그림 34. 해외사업금융보험의 구조(해외자원개발협회)	107
그림 35. 해외투자보험(PRI)의 구조(해외자원개발협회)	107
그림 36.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의 구조(해외자원개발협회)	108

제1장 해외건설 관련 펀드의 현황 및 시사점

1.1 특수 목적으로 설정된 펀드의 현황

1.1.1 특수 목적 펀드 설정 현황

현행법상 다수의 특수 목적 펀드가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정되어 있고,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상 펀드에 관한 일반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특례를 두고 있는바, 그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아래 특례들을 살펴 보면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규제가 대부분 배제되고 있는데, 이는 특수목적펀드의 주된 목적이 민간자금을 유치를 통한 투자활성화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상의 일반적인 펀드에 대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펀드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반증이라고 하겠다.

또한 특수목적 펀드는 자산의 운용을 통한 수익창출 외에 펀드 방식의 투자를 통한 특수 목적의 달성 또한 그 중요한 정책 목표라고 할 수 있는바, 그러한 개별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자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특례를 인정해 주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특례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특수 목적 펀드가 활성화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특수 목적 펀드의 설립을 허용하는 각 특별법의 입법취지가 몰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2015. 10. 25.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사모펀드 형태의 투자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특수목적 펀드는 여전히 활용 실익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특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1> 특수 목적 펀드의 개요 및 현황¹⁾ (2015. 11. 기준)

설립 근거	펀드	형태	차입	대출	담보제공	기타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투자회사	투자회사 투자신탁 (환매금지형)	허용	허용	허용	상장요건 갖추면 상장해야 함. 공정거래법상 벤처지주회사 관련 규정 적용 배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투자회사 PEF	자본금 30% 이내에서 운영비용 부족 등의 경우 허용	자본금 30% 이내에서 운영비용 부족 등의 경우 허용	자본금 30% 이내에서 운용자금부족 등의 경우 허용	공정거래법상 벤처지주회사 관련 규정 적용 배제.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투자회사 PEF	제한적 허용 (운영비용충당목적 등)	제한적 허용 (운영비용충당목적 등)	제한적 허용 (운영비용충당목적 등)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음
해외건설촉진법	해외건설투자회사 해외건설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신탁 PEF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	해외건설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	허용	투자신탁 자산총액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은

1) 이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민간투자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공정거래법**”,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농식품투자조합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해자법**”, 해외건설촉진법을 “**해촉법**”,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를 “**투자회사**”,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PEF**” 라 한다.

	해외건설 투자전문 회사		하는 범위 에서 허용	인에 대 한 금전 의 대여 또는 대 출채권의 취득 가 능		해외건설업의 시행 목적 법 인의 주식, 지 분 및 채권의 취득 또는 대 출에 사용하여 야 함
선박투 자회사 법	선박투자 회사	상법상 주식회사	차입 또는 사채발행이 자본금 10배 이내에서 선 박 취득 등 의 용도로 허용	공모의 경우 허 용	공모의 경 우 허용	공모의 경우, 상장요건 갖추 면 상장해야 함.
부동산 투자회 사법	부동산투 자회사	상법상 주식회사	공모의 경우 허용 (자기자본 2 배 이내)	공모의 경우 허 용	공모의 경 우 허용	자기관리 부동 산투자회사의 경우 실체가 있는 회사임. 상장요건 갖추 면 상장해야 함.
산업발 전법	기업구조 개선 사 모투자전 문회사	PEF	차입,보증 합 계가 펀드 자산총액에 서 부채총액 을 뺀 가액 의 10%를 초 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	제한적 허용 (자본시 장법에서 요구하는 재산운용 에 사용 하고 남 은 재산 을 단기 대출에 활용 가 능)	차입,보증 합계가 펀 드 자산총 액에서 부 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허용	자산운용상 특례 없음 (기업구조개선 목적 경영참여 형 사모집합투 자기구)
기업구 조조정 투자회 사법	기업구조 조정투자 회사	상법상 주식회사	자기자본 2 배 이내 허 용	자산총액 범위 내 에서 허 용	자산총액 범위 내에 서 허용	은행법 등의 출자한도 등 규제, 공정거래 법상 지주회사 규제, 금융지주 회사법 적용배 제
문화산 업진흥 기본법	문화산업 전문회사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유 한회사	공모문화산 업전문회사 의 경우 허 용	공모문화 산업전문 회사의 경우 허 용	공모문화산 업전문회사 의 경우 허 용	
농식품 투자조 합법	농식품투 자조합	민법상 조합	공모농식품 투자조합의 경우 허용	공모농식 품투자조 합의 경 우 허용	공모농식품 투자조합의 경우 허용	
중소기				허용	허용	

업창업 지원법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	상법상 주식회사	허용. 자본금 및 적립금 총액 의 10배 이 내에서 사채 발행 허용			
		민법상 조합	금지. 단 공 모창업투자 조합의 경우 허용	공모창업 투자조합 의 경우 허용	금지. 단 공모창업투 자조합의 경우 허용	
벤처기 업육성 에 관 한 특 별조치 법	한국벤처 투자조합	투자조합 (적용되는 법에 관 한 언급 없음)	금지. 단 공 모한국벤처 투자조합의 경우 허용	공모한국 벤처투자 조합의 경우 허 용	금지. 단 공모한국벤 처투자조합 의 경우 허 용	
소재· 부품 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소재부품 전문투자 조합	민법상 조합	금지. 단 공 모소재·부품 전문투자조 합의 경우 허용	공모소재 ·부품전 문투자조 합의 경 우 허용	금지. 단 공모소재·부 품전문투자 조합의 경 우 허용	
여신전 문금융 업법	신기술사 업투자조 합	투자조합 (적용되는 법에 관 한 언급 없음)	공모신기술 투자조합의 경우 허용	공모신기 술투자조 합의 경 우 허용	공모신기술 투자조합의 경우 허용	

1.1.2 특수 목적 펀드의 실패 사례 및 그 원인

가. 자본시장법상 특별자산 펀드의 실패 원인

글로벌인프라펀드(GIF), 외화인프라펀드, 글로벌코퍼레이션펀드 등 해외 건설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프로젝트 펀드들이 대규모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외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까지 집행되는 경우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부진의 원인으로서는 해외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 펀드들이 모두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설정됨으로써 해외건설 사업에 특화된 투자 방식이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설정된 펀드들은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펀드들이고,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투자에 활용되는 방식이나 기법은 동일하여 해외건설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초기 투자 후 투자금 회수까지 걸리는 기간이 일반 금융투자상품에 비하여 장기인 해외건설 펀드에 대한 투자의 경우, 일반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고수익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투자를 망설이게 되고, 그로 인해 투자대상 기초사업의 초기운용을 위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질수록 해외건설 준공시점이 늦어져 투자회수가능시기도 늦춰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투자대상 기초건설사업의 적정 운용을 위한 초기 자금 투입을 위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 차입, 안정적인 이자 수익 확보를 위한 대출 투자 등이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해외건설 사업에 필요한 대출채권 투자나 담보제공 등이 금지됨으로써 투자대상에 따라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펀드 등록 및 투자자 유치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다.

나. 특수목적 펀드의 부진 및 원인

그 밖에 특수 목적 펀드의 경우 다른 펀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펀드로는 중소기업창업지원펀드와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을 들 수 있는데, 비록 정부가 위 펀드의 특수목적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창업지원 펀드의 경우 현재까지 공시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약 50여개에 그치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 “<http://mdiva.kvca.or.kr/>” 참조),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의 경우 약 28개에 그치는 등 다른 펀드에 비하여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창업지원 펀드의 경우 아래 그림<1>와 같이 실제로 창업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원인은 펀드 운용 주체가 투자 대상으로 삼을만한 투자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고, 투자처가 되는 성장 가능성 있는 창업회사가 제대로 발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림<1> 중소기업창업지원 펀드 중 하나인
KT-미시간글로벌콘텐츠펀드의
창업투자회사투자현황(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

8. 창업투자회사투자현황					
공시기간		데이터가 없습니다			
투자 유형	금액(원)	보유주수	회사명	프로젝트명	프로젝트구분
해당자료가 없습니다.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의 경우,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http://www.kitia.or.kr/>)에 따르면, 위 협의회에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는 조합은 5개이고 결성금액은 1,295억 원에 달하고, 기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조합은 23개로서 결성액인 3,932억 원에 달하여 아주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위 펀드 중 가장마지막으로 등록된 펀드인 그린부품전문투자조합 제9호가 2011. 10. 21. 에 등록됐고, 그 이후 현재까지 등록된 펀드가 단 하나도 없는 점에 비추어 투자조합을 설립하여 펀드를 등록하고자 하는 유인이 현재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살펴보면, 위 2011. 10. 21. 이후에 결성금액은 제로로서 기존 자금만으로 계속해서 운용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의 투자재원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결국, 기존 투자를 회수하여야만 추가투자가 가능하고, 위 투자조합의 최소 존속기간은 5년인데 위 23개 펀드 중 이미 5년이 경과한 펀드가 상당수 존재하여 언제든지 투자금을 회수하고 추가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서 결국 특수목적펀드가 소재부품전문기업의 발전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림<2>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등록·관리 조합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단위: 억원)

No	조합명	결성금액	등록일
1	산은캐피탈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1호	150	2002-04-26
2	기은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제1호	150	2002-10-18
3	산은캐피탈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2호	100	2004-12-31
4	DCC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145	2005-09-30
5	KoFC-KDB 부품·소재투자조합1호	750	2010-07-01
합계		1,295	

위와 같은 원인은 투자조합결성의 동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인데, 이는 다른 특수목적 펀드처럼 정부차원에서 투자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감면한다는 등의 투자위험 분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투자유인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재부품투자조합의 등록 요건으로 출자금 총액 10억원 이상, 존속기간 5년 이상이라는 의무를 부과하여 소재부품산업을 육성, 전문화, 대형화 하고자 하는 정부차원의 목적을 달성을 꾀하고 있는데, 이 점은 민간투자자에게는 투자의

동기를 제공할만한 요소가 아니다. 민간금융의 이탈만을 촉진시킬 뿐이다. 민간금융이 한계를 보일 경우 적극적으로 민간금융을 유치하기 위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투자위험을 분산시켜 주는 정부차원의 조치가 있거나 정부 자체의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소재부품투자펀드의 경우 민간금융에 의존하면서 민간금융의 투자 동기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율배반적인 양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1.1.3 특수 목적 펀드의 성공 사례 및 그 시사점

가. 해외자원개발펀드

특수목적 펀드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펀드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근거한 해외자원개발펀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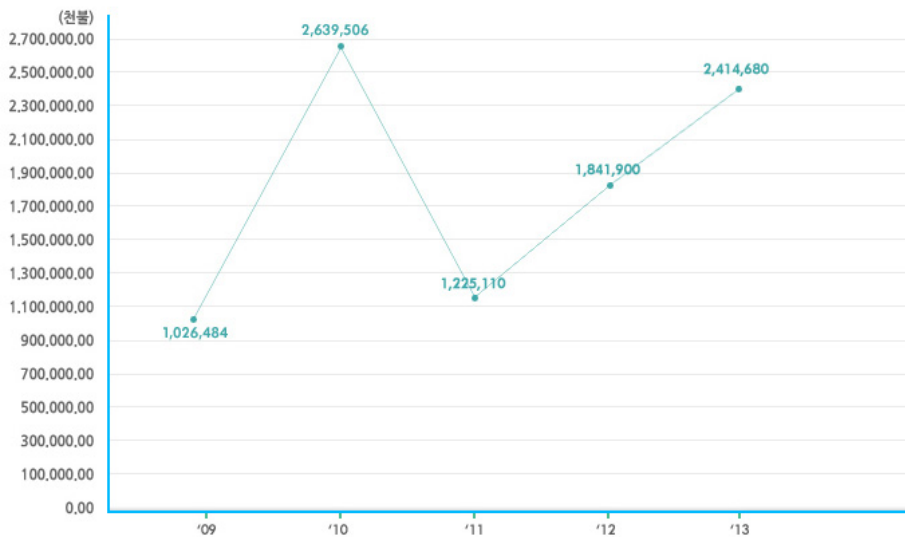
이처럼 해외자원개발펀드가 다른 특수목적 펀드에 비하여 특별히 활성화된 이유를 살펴 보면,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대책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일일 251만 배럴, 연간 9억 배럴 이상의 원유를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는 기업의 수익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의 안정, 지속적인 산업발전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도 세계 각지에서 해외자원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국내 자원개발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위와 같은 배경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해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고, 아래 그림<3>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도 2011년을 기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3> 산업통상자원부통계-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현황



이와 같은 투자 활성화는 해외자원개발이라는 투자대상 기초사업이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과 결부되어 국가적 사업의 성격을 갖게 됨에 따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국가적 지원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특수목적 펀드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 중 하나로 투자대상사업이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중요성 및 국가적 차원의 지원가능성 등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피고, 성질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중요

목적의 특수목적펀드에 해당 지원을 실시한다면 다른 특수목적펀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기업지원제도²⁾로는 크게 보조제도, 융자제도, 자원개발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감면 및 투자위험보증제도,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제도, 무역보험공사의 금융지원제도, 세제지원제도, 산업은행의 금융지원제도가 있다³⁾.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0조), 2015년의 국고보조금 집행은 아래 <표 2>와 같은 집행계획에 따라 실시되었다.

<표 2> 2015년 국고보조금 집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35호)

보조대상사업	예산액	보조대상자
<input type="checkbox"/>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6,787백만원	
○ 조사사업	5,727백만원	해외자원개발추진사업자 한국광물자원공사
○ 기반구축사업	710백만원	한국광물자원공사
○ 융자심의회 운영	350백만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또한 국내외 자원개발사업(탐사개발 및 생산)의 자금을 지원하여 국내외 자원개발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해외자원개

2) 이하 내용은 해외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 (<http://www.emrd.or.kr/>)를 참조.

3) 본 절은 각각의 지원제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제2장의 관련 부분 참조.

발사업에 대한 정부융자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1조), 특히 성공불융자의 경우 사업 실패 시 원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사업실패 위험이 큰 탐사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성공불융자의 경우 고위험인 탐사사업 및 투자위험보증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상업적 생산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경우, 상업적 생산에 이른 경우 천재지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급변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특성 등 사업경영상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등을 원인으로 사업실패 시 원리금을 감면해주고, 대신 사업이 성공할 경우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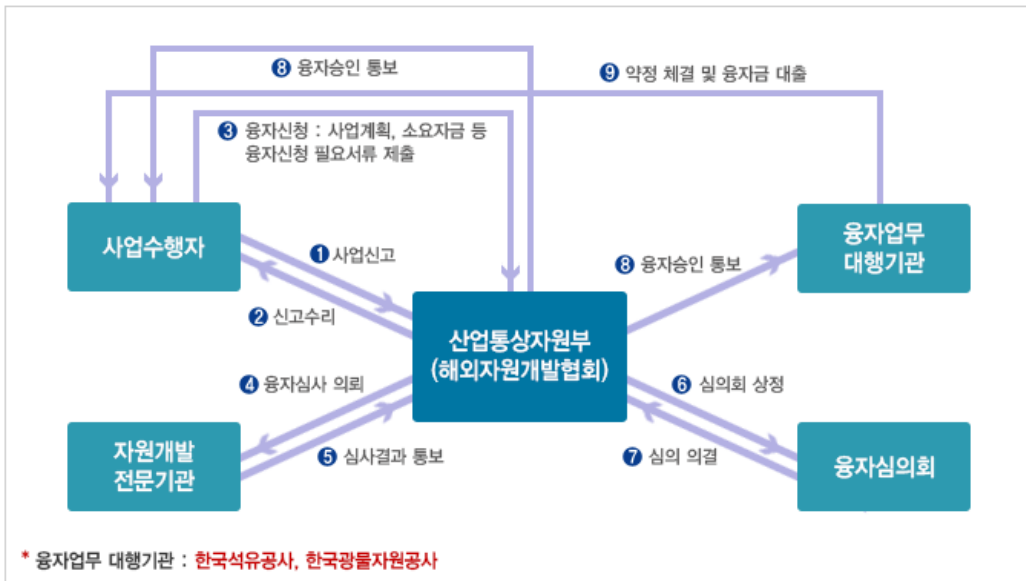
그림<4> 최근 5년간 융자지원현황 (해외자원개발협회)

지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국내외유전개발	2,409	2,217	1,560	1,000	1,706
해외광물개발	684	684	440	300	300
합계	3,093	2,901	2,000	1,300	2,006

마지막으로 유전사업의 경우 투자위험이 높아 자금유치가 어려운 사정을 반영하여 투자위험 보증제도를 두고(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8, 동법 시행령 제12조의7), 투자위험보증기관에 대하여는 정부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및 공고로 일정자격의 투자위험보증기관을 모집하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로 하여금 투자위험보증기관과 손실보상 약정을 의무적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투자를 망설이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림<5> 용자절차 (해외자원개발협회)



표<3> 투자위험보증기관 모집공고 중 신청자격

1. 국내에서 보증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한 자
2. 해외투자 및 국제차관거래 등에 대한 보험 또는 보증업무의 경험을 보유하고 해당 국가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분석시스템을 보유한 자
3. 해외자원개발사업의 투자자, 운영자 등에 대한 해외신용정보의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정보망을 보유한 자
4. 해외사업 또는 대외거래에 대한 해외채권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관리시스템을 보유한 자

나. 농림수산물식품 투자조합

특수목적 펀드 중 또 다른 성공사례로는 농식품투자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을 들 수 있다.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에는 2015. 10. 31. 기준으로 총 펀드규모 6,500억원 상당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되어 있다. 이는 상당수의 자산운용사들이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되는 형태의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와 같이 대규모의 자금조달을 가능케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반영한다면,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활발한 자산 운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농림수산물식품펀드의 출자유치 방식은 민관합작을 통한 방식으로, 민간자본 및 정부가 조성한 농림수산물식품모태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의해 출범한 농림수산물식품모태펀드(MIFAFF Fund of Funds)⁴⁾는 농림수산물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물식품산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조성하는 투자펀드시스템으로, 농어업 경영체, 식품사업자 등 농림수산물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또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는 방식의 재간접펀드이다.

농림수산물식품모태펀드는 실질적으로는 민간투자유치 유인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식품투자조합의 자펀드가 결성된 경우, 농림수산물식품모태펀드가 펀드 결성액의 5%까지 손실을 충당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내기 어려운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4) 이하 내용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농림수산물식품모태펀드 홈페이지 내용을 (<http://fund.moaf.kr/>)참조.

또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관련 펀드 기준 수익률을 이례적으로 0%로 정하여 원금 외에 소액이라도 수익이 발생하면 운용사가 성과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구조화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혜택으로 인하여 운용사들이 농식품투자조합의 자펀드를 결성하게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자금유치규모가 확대되는 것이다.

즉, 일반적인 투자 유치 촉진기법으로 활용되는 (재)간접펀드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부는 더 나아가 대기업, 코스닥 상장사와 합작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이 판매하는 상품의 기초자산인 농림수산업 등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농식품투자조합의 자펀드로 결성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는 지난 2015. 8. 13. 농식품 관련 창업벤처에 투자하는 120억원 규모의 창업아이디어펀드를 조성하였는데,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가 70억원, GS그룹이 30억원, 코스닥 상장사인 디티앤씨가 전액 출자한 디티앤인베스트가 20억원씩 각 출자하기로 하였다. 창업아이디어펀드는 새로운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농식품 사업을 준비하거나 사업 개시 후 3년이 안된 청년 창업경영체에 주로 투자하는데 이를 통해 농식품 관련 벤처사업이 발전하고 수익성이 증대될 경우, 자연히 농식품투자조합 판매상품의 기초자산의 가치도 상승할 것이고, 이로 인해 신규자금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선순환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투자조합의 자펀드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고 있는데 정부의 역할이 자금조달의 측면에서 순기능으로 작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본 해외자원개발펀드의 경우 투자대상사업의 중요성으로 인해 정부의 지속적인 자금투입이 이루어지고 투자규모가 증가한 것이 특수목적펀드의 성공요인이었는데 농식품투자조합의 경우 정부적 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동일하나, 투자대상인 기초사업과 관련한 벤처기업에 관련된 펀드를 새롭게 유치하고

이를 지원하는 형식을 택하고, 이와 같은 간접펀드 형태의 자펀드의
결성을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하는 특색이 있다.

1.2 국내 해외건설 관련 펀드의 현황

1.2.1 해외건설특화펀드 설정 현황과 실제 투자 규모

가. 2015. 5. 현재 설정된 펀드 현황

국내에서 해외 건설·플랜트 사업(Infra-structure, Plant)의 투자에 특화되어 설정된 펀드로는 ① 글로벌인프라펀드(GIF), ② 외화 인프라 펀드, ③ 글로벌 코퍼레이션 펀드가 있다.

글로벌인프라펀드는 국내 건설사의 해외 인프라 사업을 돕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가 주도하여 조성한 민·관 공동 설립 펀드로서, 2015. 5. 현재 제1호, 제2호 펀드가 각각 1,500억 원, 2,000억 원을 설정액으로 하여 설립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글로벌 인프라 펀드 설정 현황(2015. 5. 기준)

구분	글로벌 인프라 펀드(GIF)	
	1호	2호
설정일	2014.12	2011.08
설정액	1,500억원 (capital call)	2,000억원 (capital call)
출자자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1,000억, 금융기관 500억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1,000억, 금융기관 1,000억
운용사	KDB인프라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펀드성격	해외 인프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관련	해외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 또는 대출채권 취득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및 대출채권
투자내역	투자실적 없음 ⁵⁾	파키스탄수력발전(400억), 포르투갈태양광발전(400억)
비고	Blind Fund	Blind Fund

외화인프라펀드는 KDB산업은행, 삼성생명, 교보생명, NH농협생명이 정부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2013. 8. 28.)”에 따라 국내기업의 지속적 해외진출 및 국내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하여 5억 달러 규모의 외화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여, 2013. 11. 미화 5억 달러를 설정액으로 <표 5>와 같이 설립되었다.

<표 5> 외화 인프라 펀드 설정 현황(2015. 5. 기준)

구분	외화 인프라 펀드
설정일	2013.11
설정액	5억 달러(USD) (capital call)
출자자	산업은행(25%), 삼성생명(25%), 교보생명(25%), 농협생명(25%)
운용사	미정
펀드성격	투자개발형사업 기존사업자의 Equity 투자분 EXIT 할 때 투자
투자내역	투자실적 없음
비고	Blind Fund

5) 첫 투자대상으로 삼성물산이 수주한 터키 키리칼레 복합화력발전플랜트 사업의 설계·구매·시공(EPC) 사업을 선정함(2015. 4. 27. 국토교통부).

글로벌코퍼레이션펀드 또한 국내 건설 기업의 투자개발형 사업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 미화 6억 달러의 3가지 펀드로 설정되었으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6>와 같다.

<표 6> 글로벌 코퍼레이션펀드 설정 현황(2015. 5. 기준)

구분	글로벌 코퍼레이션 펀드		
	한-호주	한-중동	한-중국
설정일	2013.10	2014.04	2014.03
설정액	1.9억 달러 (capital call)	2억 달러 (capital call)	2.1억 달러 (capital call)
출자자	산은 90백만, KTB PE 5백만 / 호주 퀸즐랜드투자공사 (QIC) 95백만	산은 70백만, 수은 15백만, 광우티앤씨 3백만, KB인베스트먼트 10백만, 이오스파트너스 2백만/ 싱가포르투자청 (GIC) 100백만	산은 47백만, NPS 56백만, 린드먼아시아 2백만 / 중국강소성 정부출자기관 (GOVTOR) 105백만
운용사	KTB PE	KB인베스트먼트 이오스파트너스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
펀드 성격	호주, 뉴질랜드에 진출하는 한국기업 및 한국에 진출하는 호주, 뉴질랜드	중동에 진출하는 한국기업 및 한국에 진출하는 중동기업의 지분투자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기업 및 한국에 진출하는 중국기업의 지분투자

	기업의 지분투자 JV 설립 포함	JV 설립 포함	JV 설립 포함
투자 내역	호주법인 (187억원) - 해외파트너 187억원 매칭투자	투자실적 없음	한국상장사 (250억원) - 해외파트너 투자 없음
비고	Blind Fund, 국내와 해외출자자간 1:1 매칭방식 투자		

나. 조성 예정 펀드

정부는 2015. 3. 11.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지난 2013. 8. 28. 있었던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 방안에 대한 추진실적 및 개선과제를 발표⁶⁾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현재 조성된 펀드의 본격적인 투자를 지원하고, 추가로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이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지분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정부는 2015. 3. 19. 중동순방 성과 이행 및 확산방안⁷⁾에서 이와 같은 기조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다 구체적인 설정액과 추가 펀드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신규로 조성이 추진될 펀드는 ① 현재 수출입은행이 1,500억 원 규모로 조성 중인 글로벌 에너지·인프라 펀드, ②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KIC) 주도로 국내 투자기관, 해외 국부펀드 참여를 유도하여 총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가칭 글로벌 해

6) 기획재정부, 2015. 3. 11. 보도자료(해외건설·플랜트 수주지원협의회 1호 안건)

7) 기획재정부 2015. 3. 19. 보도자료(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양펀드, ③ 국토교통부 주도로 1,0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인 개도국 수력발전 투자펀드이다.

다. 해외 건설 투자 규모 현황

(1) 국내 기업 해외 건설 수주 현황 및 정책 자금 지원

2014년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액은 총 미화 660억 달러로 UAE 원전건설사업을 수주했던 2010년에 이어 역대 2위를 기록하였다. 최근 5개년 및 2015. 6. 11.까지의 수주 실적은 아래 <표 7>와 같고, 최근 6개년 국내 건설사 해외 수주 현황 상세 내역은 <그림 6>와 같다.

<표 7> 최근 5개년 수주액(단위: 억 달러(USD))⁸⁾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6
연간실적	716	591	649	652	660	235

<그림 6> 최근 6개년 국내 건설사 해외 수주현황(해외건설협회)

(단위: 억 달러(USD))

8) 국토교통부 2015. 6. 11. 보도자료(해외건설 진출 반세기만에 누적 수주 7천억불 돌파' 보도 관련)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합	비중
현대건설	42	30	47	105	109	110	443	11.8
삼성 ENG	93	36.2	70.6	105	31.7	42.4	378.9	10.1
GS건설	69	47.9	41.6	44.8	52.9	59.5	315.7	8.4
삼성물산	3.6	25	46	37.9	134.8	65.4	312.7	8.3
현대 ENG	14	35	41	35.9	52.7	96.5	275.1	7.3
SK건설	39	24.8	37.2	26	48	66.8	241.8	6.4
현대중공업	45.8	44.5	11.8	36	49.9	39.7	227.7	6.1
대우건설	27.5	25.4	50	38.2	49.9	35.5	226.5	6.0
대림산업	26.4	30.9	59.2	23	39.5	24.5	203.5	5.4
포스코건설	9.3	21.9	68.9	44	17.6	23.9	185.6	4.9
두산중공업	12.5	77.4	2.1	17.9	8.2	20.9	139	3.7
한화건설	9.5	2.2	18.5	84	8.5	9.5	132.2	3.5
포스코 ENG	1.4	5.1	0.2	2.7	4.7	5	19.1	0.5
기타	98	309	97	48	45	60	657	17.5
합계	491	715	591	648	652	660	3,757	100.0

2014년 수출입은행은 28.5조 원, 무역보험공사 12.8조 원 등 정책 금융기관이 총 32.3조 원⁹⁾의 자금을 지원(보증 등)하였으나, 민간금융기관의 참여가 저조하여 향후 온랜딩 방식¹⁰⁾의 자금 지원도 추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프라펀드 등을 활용한 투자는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2) 세계 건설시장 동향 및 국내 기업의 금융 조달 실태¹¹⁾

2015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4% 성장한 8.8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중 인프라시장은 2.7조 달러(전체의 32%), 인프라 분야 중 도로·다리·항만 등 교통 분야는 1.28조 달러, 플랜트

9) 2015. 6. 12. 고시 환율 기준 약 290.8억 달러(USD)

10) 중소기업의 해외 수주 등에 필요한 소유 자금을 국내 중개금융기관을 통해 공급하는 간접대출

11) 한국수출입은행, 「세계 건설시장 동향 및 시사점」, 2015-중점분석-01(2015. 4. 29.), 해외경제연구소

를 포함한 비주택분야는 2.6조 달러로 예측되고 있다. 이후 2018년까지 세계 건설시장은 연 평균 4%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향후 5년 내에 10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2014년 세계 건설시장 규모는 8.5조 달러였으나, 이 중 민간 건설기업이 접근 가능한 해외건설시장 규모는 5,500억 달러 수준으로 전체 시장의 6.5%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민영화 바람으로 2018년에 해외건설시장 규모는 8,0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2007년 이후 해외건설 수주액을 꾸준히 늘리고 있으나, 2012년 이후 수주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고¹²⁾, 2015년엔 56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우수한 건설경쟁력(세계 5위¹³⁾)에도 불구하고, 설계경쟁력이 떨어지는 점과 자본집약형 산업으로 변화 중인 해외건설산업의 경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금융역량이 부족한 점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선진기업과 경쟁하기 위하여는 시공자 금융조달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 등 금융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해외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¹⁵⁾에서도 ① 해외사업 수주활동 중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로 정부차원의 지원(금융, 세제) 미비를 꼽았으며(26.7%), ② 해외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관련협회 등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 중 첫 번째

12) 2011년 우리나라 기업 수주 증가율 3.7%, 해외건설시장 연평균 성장률 10%

1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글로벌 건설 경쟁력 평가(1차년도)」, 『2014년도 주요사업 연차 보고서』 2014. 12. 35쪽, 종합 순위는 8위

14) 한국수출입은행, 앞의 보고서, 80쪽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위의 보고서, 172쪽 -

로 해외시장 개척지원기금의 확대(26%)가 지적되었다.

나아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프로젝트 투자펀드가 공기업 부채 감축 및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하여 실제로 집행된 경우는 거의 없다.¹⁶⁾

따라서 단순 시공 사업 위주의 사업 전략을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사업인 투자개발형 및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사업의 수주가 가능하도록 금융지원 규모와 형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1.2.2 해외건설 관련 펀드 형태의 투자가 부진한 이유

전술했듯이 글로벌인프라펀드(GIF), 외화인프라펀드, 글로벌코퍼레이션펀드 등 해외 건설 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프로젝트 펀드들이 대규모로 설정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외 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까지 집행되는 경우는 사실상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부진의 원인으로는 해외건설 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 펀드들이 모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설정됨으로써 해외건설 사업에 특화된 투자 방식이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설정된 펀드들은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펀드들이고,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투자에 활용되는 방식이나 기법은 동일하여 해외건설 사업에 투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16) 건설경제신문, 2015. 3. 19.자 기사

특히 해외건설 사업에 필요한 대출이나 담보제공 등이 금지됨으로써 투자대상에 따라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펀드 등록 및 투자자 유치에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해외건설 사업에 특화된 전문 운용이나 자산운용회사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나아가,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설정된 일반적인 펀드에 대한 규제들은 장기간에 걸쳐 건설 사업에 투자하고 다시 오랜 기간 동안 점차적으로 수익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 해외건설투자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활용 가능한 투자 주체가 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설정된 펀드들이 해외건설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고, 어떻게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서술하기로 한다.

1.2.3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설정된 펀드의 한계

가. 개요

자본시장법은 주로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투자를 위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전제로 하고 있고,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한 공모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각종 규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행위 규제와 관련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해외건설특화펀드와 같이 특별한 프로젝트성 자산에 장기간 투자하여야 하는 집합투자기구에는 불필요한 규제인 경우가 많아 이러

한 규제가 해외 건설 사업 투자에 대한 근본적인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이나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서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자본시장법상의 규제에 대한 예외를 상당히 허용하고 있는바, 해외 건설 사업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적 정비의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본시장법의 어떠한 규제가 해외 건설 투자에 장애 요소로 작용하는지를 먼저 살펴 볼 필요가 있는바, 이하에서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해외 건설 투자에 장애가 되는 주요 규제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 인가요건 및 자산운용 방식의 한계

자본시장법은 제12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16조 제3항 및 별표 1에 의하면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기 위한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해외건설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여 해외 건설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42조 제2항 제4호는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위탁을 함에 있어서 본질적 업무에 대한 수탁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여야만 한다는 규제를 두고 있다. 이는 해외건설업 및 이에 대한 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자에 대한 업무위탁을 제한하여 해외건설업에 대한 전문성이 필수적인 해외건설 관련 펀드의 운용의 폭까지도 제한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

자본시장법 제42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 각 호의 업무 및 제41조제1항의 부수업무와 관련하여 그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삼자에게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위탁받는 업무가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투자업자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그 본질적 업무를 위탁받는 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가 외국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① 법 제42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금융투자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6호나목 및 다목의 업무 중 채권추심업무 및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3. 집합투자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의 설정을 위한 신탁계약의 체결·해지업무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투자유한회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투자합자회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4호의2에 따른 투자유한책임회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투자합자조합(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투자익명조합(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업무
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행사를 포함한다]

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86조는 운용실적에 연동한 성과보수를 받지 못한다는 규제를 두고 있다. 이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성과보수를 위하여 무리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규제라고 할 수 있다¹⁷⁾.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다양한 지분증권, 채권에 투자하는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무리한 종목 선정 등을 막는데 효과적일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투자 대상의 수가 많지 않고 한 번의 투자로 인해 장기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고민하여야 하는 해외 건설 투자의 경우에는 성과보수 형태의 수수료 지급을 제한할 유인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자본시장법 제86조(성과보수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라 한다)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 자금차입의 한계

자본시장법은 제83조 제1항에서 금전 차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대량의 환매청구나 대량의 매수청구로 인한 대금 지급 곤란 시에만 제한적으로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자금차입이 허용된 경우에도, 그 차입금 전액을 모두 갚기 전까지 파생상품의 전매와 환매를 제외하고는 투자대상자산을 추가로 매수할 수 없다는 규제가 추가로 부가된다.

17)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 I, 박영사 p.571

이러한 제한은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에 있어서 자금차입을 허용할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위험한도액을 증가시키게 되고 투자자산의 가격 하락시 투자자의 손실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문제점과 집합투자기구의 채무부담과 이자상환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다¹⁸⁾.

자본시장법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借入)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235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2. 보험회사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는 그 차입금 전액을 모두 갚기 전까지 투자대상자산을 추가로 매수(파생상품의 전매와 환매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8)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 I, 박영사 p.555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회수해야 하는 해외건설투자의 본질상 효율적인 자금 운용과 원활한 현금흐름을 저해하는 규제가 될 수밖에 없다.

위 자본시장법 규정이 예외적으로 차입을 허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기준이 대량 환매청구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될 뿐 아니라 이 때에도 집합투자재산 총액의 10%라는 제한이 있는 것은 집합투자기구의 장기적인 현금 흐름에 대한 상당한 리스크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규제는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규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라. 담보제공의 한계

자본시장법은 제83조 제5항에서 채무보증과 담보제공 또한 금지하고 있다.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외의 행위가 되며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다¹⁹⁾.

자본시장법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담보제공 제한 조항은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가 Project Financing 기법에 의하여 자금을 조달할 때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해외건설투자에 있어 펀드 방식의 투자를 할 수 없게 하여, 해외투자

19)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 I, 박영사 p.558

개발형 사업에 자본투자자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장애규정으로 작용하고 있다.

마. 대출채권 투자의 한계

자본시장법 제83조 제4항에 의하면 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전을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금전의 대여가 사실상 대부업 등 다른 금융업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허용할 경우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대출하여 주고 그 이자를 수취하는 형태의 또 다른 금융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점과 본래 투자목적에 벗어나 대여행위를 통하여 집합투자재산이 부실화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다²⁰⁾.

자본시장법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 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Project Financing에서는 지분투자와 대출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기간의 투자를 해야 하는 해외건설투자의 경우 지분투자만으로는 초기에 수익을 내기가 어려우므로 초기에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대출투자가 병행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러한 자본시장법상의 규제 조항으로 인하여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직접 대출을 실행하는 대신 대출을 이미 실행한 브릿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채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대출채권 투자를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회적인 방식을 통한 수수료 등 비용 증가와 거

20) 한국증권법학회, 자본시장법 주석서 I, 박영사 p.557

래와 관련한 시간이 불필요하게 소요됨으로써 결국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수익률을 중국적으로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1.2.4 해외건설특화펀드의 도입과 그 한계

가. 해외건설특화펀드의 대출투자 허용

해외건설특화펀드는 장기간의 건설과 운용기간을 필요로 하는 투자구조로 인하여 일정 수익률 유지를 위해 지분투자(Equity) 이외에 대출투자(Loan)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 제83조 제4항에서는 명시적으로 펀드의 대출이나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고 있어 브릿지론 등의 우회적인 수단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지분투자만 할 경우에는 초기 건설단계에서 운영수입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가 없고,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투자회수가 어려운 상태가 유지되어 투자유치에 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국내금융기관은 외화 브릿지 대출을 거의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해외 사업에 투자할 경우 브릿지 은행을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여 진다. 즉 브릿지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도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투자법 제44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4조의 2,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19조에서는 관련 특화펀드의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고 있었고, 해외건설 촉진법에도 2015. 8. 11. 동법 제19조의6 제1항을 신설하여 해외건설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

여 또는 대출채권의 취득을 허용하였고 2016. 2. 12.에 시행될 예정이다.

나. 해외건설특화펀드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 허용

해외건설특화펀드가 FI(재무적투자자)로 투자할 경우 대주가 펀드가 투자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83조 제5항에서 펀드 자산에 대한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설정된 펀드는 담보제공이 금지되므로 위와 같은 대주의 요구에 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는 대주의 자금제공의 거부로 이어져 해외펀드의 자금조달이 매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투자법 제44조,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4조의 3,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0조에서는 관련 특화펀드의 담보제공 및 채무보증을 허용하고 있었고, 해외건설 촉진법에도 2015. 8. 11. 동법 제19조의6 제3항에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2016. 2. 12.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 해외건설특화펀드의 자금차입 허용

해외건설투자의 경우 투자 후 장기간에 걸쳐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운용기간 중에 자금이 필요함에도 수익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추가 자금조달을 위한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제8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금차입을 금지하고, 대량환매청구 등 예외적인 경우 펀드 순자산의

10%이내의 자금차입만을 허용하고 있어 중도 자금차입 없이는 추가 자금조달이 어려운 해외건설투자사업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위한 민간투자법 제41조의 5,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4조의 3,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0조에서는 관련 특화펀드 자본금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자금차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해외건설 촉진법에도 2015. 8. 11. 동법 제19조의 7에 운용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차입하는 때에 주주총회 또는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자금차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2016. 2. 12.에 시행될 예정이다.

1.3 인프라펀드의 해외 사례 검토

1.3.1 세계 인프라 건설수요와 투자 현황

2006년 OECD는 2030년까지 글로벌 인프라 수요를 USD 50조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였다.²¹⁾ 또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기후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인프라에 투자하여야 할 금액이 2050년까지 약 USD 45조에 이르며, 1년에 약 USD 1조에 달한다고 예상하였다.²²⁾

그리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설립으로 아시아 국가들의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 건설자금지원이 본격화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 개도국의 인프라 건설에 2020년까지 USD 8조 가량이 투자될 것으로 보고 있다.²³⁾

이러한 수준의 투자는 전통적인 공공재원만으로는 원활하게 금융이 이루어질 수 없고, 금융위기의 여파로 각국 정부의 재정에 위기가 생겼고, 이에 정부의 재정을 기반으로 한 인프라 사업은 줄어드는 추세이다.²⁴⁾

한편, 전세계 주요 연기금들은 장기 저금리와 저성장의 영향으로 수익률 저하를 겪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체투자, 특히 인프라 투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동시에 투자를 받는 국가의 사회적 요구까지 충족할 수 있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²⁵⁾

21) OECD, *Infrastructure to 2030* (2007. 5.)

22) IEA,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08)

23) 동아일보, “AIIB, 5년간 8조달러 인프라 투자… 해외건설 재도약 기회” (2015. 11. 4.)

24) OECD, INTERNATIONAL FUTURES PROGRAMME, *Pension Funds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A Survey*(2011. 9.)

25) 머니투데이, “국부펀드도 대체투자-인프라 “공공펀드 공동투자 활용해야” (2015. 11.

따라서 세계 인프라 시장 및 사회적 수요와 인프라 시장이 안정적이고 적절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처로서의 수요가 결합하여, 세계 주요 연기금의 인프라 투자는 아래 <표 8>과 같이 모두 활성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²⁶⁾

<표 8> 주요 연금 인프라 투자 비중(2010)

Name of the fund	Infrastructure Investment							
	Unlisted Equity		Listed Equity		Fixed Income		Total Infrastructure Asset	
	millions in USD	% of total portfolio asset	millions in USD	% of total portfolio asset	millions in USD	% of total portfolio asset	millions in USD	% of total portfolio asset
CPPIB	8,193	6.0	1,066	0.8	na	na	9,259	6.8
OMERS	8,057	15.5	n.a.	0.0	n.a.	0.0	8,057	15.5
OTPP	6,863	7.0	696	0.7	1606	2	9,165	9.3
AustralianSuper	3,934	11.5	79	0.2	35	0.1	4,048	11.8
Future Fund	2,702	4.1	na	na	na	na	2,702	4.1
PFZW	2,649	2.0	n.a.	0.0	n.a.	0.0	2,649	2.0
UniSuper	1,134	4.4	n.a.	n.a.	n.a.	0	1,134	4.4
USS	1,440	2.9	n.a.	n.a.	n.a.	n.a.	1,440	2.9
ABP	845	0.3	n.a.	n.a.	n.a.	n.a.	845	0.3
Sunsuper	642	4.3	n.a.	n.a.	37	0.2	679	4.5
Superannuation NZ	455	3.3	876	6.6	na	na	1,331	9.9
PFA	366	0.7	n.a.	n.a.	n.a.	0.0	366	0.7
PMT	275	0.6	n.a.	n.a.	n.a.	0	275	0.6
GEPPF	74	0.1	n.a.	n.a.	347	0.2	421	0.3
Total	37,630		2,717		2,024		42,371	

Unlisted Equity: 연금의 직접 투자 및 집합투자기구 이용 투자 비중

4.)

- 26) OECD, Working Papers on Finance,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s, No. 29, Trends in Large Pension Fund Investment in Infrastructure(2012. 11.), 다만 각국마다 활성화 정도는 각국에서 인프라투자를 대체투자 수단 중 하나로 인식하는지 새로운 수단(New Class)로 인식하는지, 그리고 인프라 시장의 성숙도, 연금에 대한 규제, 인프라 투자의 실적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특히 호주와 캐나다는 연금 및 인프라펀드에 의한 90년대부터 인프라 투자의 선각자로서, 본격적으로 인프라에 투자한지 10년이 훌쩍 넘었고, 인프라 투자를 고유한 투자 부문으로 여겨 이 부문의 투자에 대한 성숙도가 높다. 호주와 캐나다는 인프라 투자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4 - 16%로 설정하고 있다.

인프라 펀드에 국한하면, 금융 위기 전인 2006년 - 2007년 사이의 약 20개월 동안 설정된 해외 인프라 펀드는 72개이고, 이들 펀드의 총자본금은 약 USD 13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²⁷⁾

그런데,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듯이, 인프라 투자가 활발한 주요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같이 특별법을 통하여 해외건설에 특화된 집합투자기구를 인정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나라마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 및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각국의 법제를 특정 법률만 가지고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과 비교하여 허용하는 범위가 넓은 법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하에서 PPP가 발달하고,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된 호주, 캐나다, 영국(EU), 미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의 시사점을 찾아본다.

1.3.2 호주의 인프라펀드

가. 민간투자사업 관련 법령

27) 조동일, 「국내 인프라 펀드 활성화 방안 연구」(2011. 2.)

호주는 PPP 제도가 일찍 발달한 나라로서, 2008년 효율적인 PPP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민관 협력사업 정책 및 지침(National Public Private Partnership Policy and Guidelines)(2008. 1. 29. 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08 호주 사회기반시설법 (Infrastructure Australia Act 2008)이 제정되어 사회기반시설운영 전담 기구인 호주 사회기반시설운영기구를 설립하였다.

나. 인프라펀드 규제 관련 법령

호주는 인프라펀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집합 투자기구 규제(회사법, Corporation Act 2001)에 의한 적용을 받는다. 호주에서 집합투자기구는 공모이든 사모이든 호주증권투자위원회 (ASIC)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ASIC의 자산운용 규제 등을 받게 된다.

펀드의 운용에 관하여는 금융서비스개혁법(Financial Services Reform Act)이 적용되기는 하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운용상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 자유로운 투자 운용이 가능하다.

다. 호주 연금의 인프라 투자

호주는 연금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고, 연금이 작은 단위로 쪼개져 있어 왔다. 다만 최근 경향은 이들이 통합되고 있는 것이어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106개의 펀드가 56개로 줄어들었다.²⁸⁾ 호주 연금의 자산 총액 기준 상위 15개의 합은 USD 110억 달러를 상회한다. 아래 <표9>는 상위 10개 연금의 인프라 자산 비중 기준으로서 약 8%의 투자 비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8) OECD, WP No. 32, Pension Fund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A Comparison Between Australia and Canada(2013. 7.)

<표9> 호주 상위 10개 연금 인프라 자산 비중(설정 기준)

Top 10 Australian Funds: Infrastructure Allocation					
	Fund	Market Segment	Fund Size (USD\$b)	Conservative Option (30/70)	Default Option ** (70/30)
1	Future Fund	Sovereign	73.0	5.2% ^	n/a
2	AustralianSuper	Industry Fund	43.0	9.0%	14.0%
3	QSuper	Government	32.4	3.1%	6.2%
4	State Super (NSW)	Government	32.0	5.1%*	13.8%*
5	First State Superannuation Scheme	Industry Fund	31.2	17.0%	3.5%*
6	UniSuper	Industry	29.0	0.0%	5.0%
7	Retail Employees Superannuation Trust	Industry Fund	20.4	4.0%	6.0%
8	Australian Reward Investment Alliance	Government	19.8	not available	13.8%*
9	HESTA Super Fund	Industry Fund	18.3	6.0%	10.0%
10	Sunsuper	Industry Fund	18.3	4.0%	5.0%

OECD, WP No. 32, Pension Fund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A Comparison Between Australia and Canada(2013. 7.)

호주 연금은 전통적으로 상장 인프라, 개별 회사, 상장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을 취하여 왔는데(“구호주방식”), 최근에 들어서는 사모 또는 비상장 자산에 투자하는 방식도 늘어나는 추세이나, 유럽 및 미국과는 다르게 개방형 펀드(open - ended funds)를 이용(“신호주방식”)한다.²⁹⁾

또한 Future Fund, QIC, AustraliaSuper 등 일부 호주의 큰 연금들은 호주 인프라 개발을 위하여 직접 투자하기도 하지만, 중형 및 소형 연금들은 간접 방식을 취하는 것이 보통이다.

라. 호주의 인프라 펀드 현황

The Towers Watson Alternatives Survey(2012)에 따르면 아래 <표 10>과 같이, 세계 인프라 펀드 상위 20개 중에 8개가 호주를 기반으

29) OECD, WP No. 32. 앞의 논문, 37p

로 하고 있으며, 이들 자산의 총액은 USD 920억 달러로 상위 20개 펀드 총액의 2/3 정도를 차지한다. 특히 맥쿼리 그룹은 단독으로 USD 590억 달러를 인프라 펀드로 운용하고 있다.

<표10> 세계 인프라 펀드 중 호주 인프라 펀드 규모

Global ranking	Manager	Pension AuM in US\$bn	in %	Total AuM in US\$bn	in %
1	Macquarie Group	59.1	43%	101.6	46%
2	Industry Funds Mgmt IFM	10.2		10.2	
6	QIC	6.0		10.5	
8	AMP	5.4		7.2	
9	Hastings	3.7		6.3	
11	Access Capital Advisers	3.2		3.2	
12	Colonial First State	2.9		4.1	
20	RARE Infrastructure	1.6		4.5	
	Total Australian in top 20	92.1	67.6%	147.6	66.9%
	Total global top 20	136.3	100%	220.5	100%

1.3.3 캐나다의 인프라펀드

가. PPP 시장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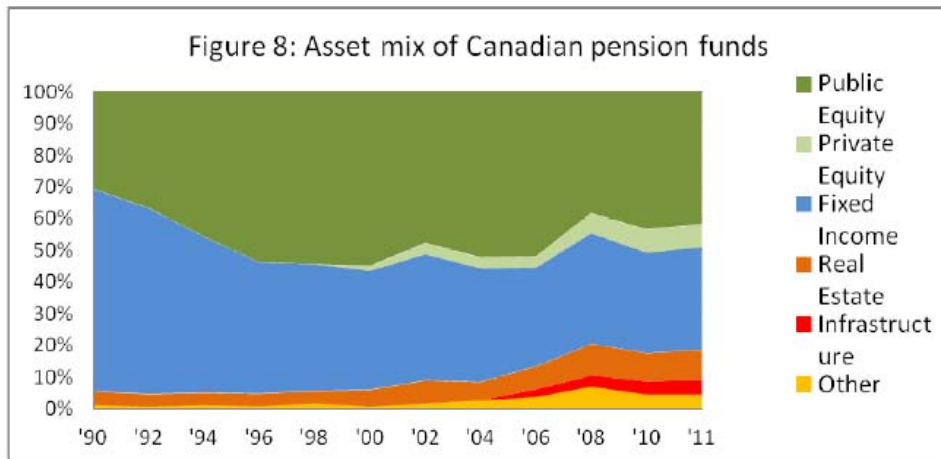
캐나다에 있어 공공 자산에 대한 순수한 민영화는 생소한 개념이었고, 1990년대 초반의 대형 인프라 수요 및 건설에도 불구하고, 여타 서구 국가인 영국이나 호주에 비하여 PPP의 활용도가 낮았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의료, 도로 및 사법 시스템 등에 있어 PPP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었고 성장하였다. 2010년 캐나다는 11개 주에 걸친 73개 프로젝트에 PPP를 통하여 CAD 12.5억 달러의 금융을 공급하였다.

나. 캐나다 연금의 인프라 투자

캐나다의 연금 총합계금액은 2012년을 기준으로 CAD 1.1조 달러에 달하고, 2012년으로부터 10년간 10.5%의 자산 성장률을 기록하였다(세계 평균 6.4%). 이는 OECD 연금 총액인 USD 20조 달러의 5.6%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네덜란드에 이어 6번째로 큰 규모이다.

또한 캐나다 연금들은 지난 10년간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중을 다음 <그림 7>과 같이 늘려서, 2011년 기준 전체 자산의 4.6%를 인프라에 투자했다.

<그림 7> 캐나다 연금 자산 비중 변화도-PIAC(2012)



상기할 만한 것은 캐나다는 연금 총액에 비하여 내수 건설 시장이 작기 때문에, 해외 인프라 투자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CDP(퀘벡주 연금)를 예로 들자면, 2010년 12월 기준 인프라 포트폴리오의 21.2%만 국내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해외 건설에 투자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의 건설 내수가 부족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연금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방향에 방향을 제시하여 준다.

캐나다는 연금에 해외투자제한(Foreign Property Rule, FPR)이 있어,

해외 투자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2005년을 기준으로 30%까지로 비교적 그 폭이 넓고, 대형 연금들은 이를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우회하고 있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못하다.

캐나다의 대형 연금들은 인프라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을 선호(‘캐나다모델’)하지만, 중형 및 소형 연금들은 인프라 펀드(보통 비상장)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을 선호한다.³⁰⁾

1.3.4 영국 및 EU의 인프라펀드

가. PFI 관련 법령

영국에서 인프라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s)를 주로 이용한다. 영국 정부는 민간부문과의 계약 체결에 의하여 감독을 하게 되며 SPV에 일종의 임대료 형식의 보상을 지급하게 된다. PFI 사업은 보통 DBFO (Design, Build, Finance, Operate) 방식을 사용하는데, 특정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이 작성한 기본 계획에 따라 민간부문이 사업의 설계(Design), 건설(Build), 자금조달(Financing), 운영(Operate)을 담당한다. 이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인 규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민간 부문과의 계약 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의 영국 재무부 지침은 존재한다.

영국은 특히 PFI 투자지분에 대한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이 발달되어 재무적 투자자의 자금회사가 용이한 특징이 있다. 유통시장의 활성화로 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 건설이 완료된 후 최초 투자지분을 시장에서 원활하게 회수하고, 회수된 자금을 기반으로 재투자

30) ECD, WP No. 32. 앞의 논문, 34p

할 수 있는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확보되는 PFI 사업은 보험사, 연기금 등 자금운용 기간이 장기인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투자유인을 제공한다.

나. 인프라 펀드 관련 법령

영국 또한 PPP 및 인프라 펀드를 별도로 규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집합투자기구를 규제하는 일반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영국은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Vehicle)를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2000)으로 규제하고 있다.

앞서 호주와 같이 사모형이면서 폐쇄형인 집합투자기구는 등록 의무를 제외하면 운용에 대한 규제 정도가 매우 약하여 사실상 운용이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영국은 EU 국가로서 대체투자펀드 운용자 지침(AFIM)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체투자펀드 운용자 규정(AIFM Regulation)을 제정하였고, 이에 따르면 사모이면서 폐쇄형이라 하더라도 AIF에 대항할 경우 FCA의 규제를 받게 되었다.³¹⁾

다. EU 연금의 인프라 투자 현황³²⁾

EU는 그간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인프라 시장의 성숙도에도 불구하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별도의 투자처로 인식한지 10년이 채 되지 못하였다. 2011년을 기준으로, 지난 몇 년 간의 비중 확대에도,

31)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사업의 펀드 투자 현황 및 규제 개선에 대한 연구 (2014. 6. 30.), 149쪽 - 159쪽

32) OECD, INTERNATIONAL FUTURES PROGRAMME, Pension Funds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A Survey(2011. 9.)

EU 연금들은 인프라에 1-3% 정도의 투자 비중일 뿐이다.

EU 연금들은 보통 간접적인 투자를 선호하고 있고, 대형 연금만 직접적인 투자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PPP 시장이 성숙되어 있지만, 나라별, 지역별 편차가 매우 커서, 영국, 프랑스 스페인을 제외한 국가들은 PPP 프로젝트 걸음마 단계이다(독일은 지방 시장에서 처리).

2011년 EU는 EU의 인프라를 개발하기 위하여 2020 Project Bond Initiative를 출범시켰다.

라. 영국의 인프라 펀드 현황

영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인프라 펀드는 런던증권거래소(LSE)에 상장된 펀드와 비상장된 펀드로 나뉜다. 영국은 인프라 펀드가 활성화 되어 있는 나라로서, 주로 폐쇄형 펀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2007. 3. 8. 상장된 3i Infrastructure plc는 2014년 기준 GBP 9.1억 파운드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세계의 다양한 인프라 자산에 투자하여 유럽, 북미, 아시아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2006. 3. 31. 상장된 HICL Infrastructure Company Ltd는 폐쇄형 투자회사로서 자산이 GBP 13.9억 파운드에 달한다.

영국 증권시장은 펀드의 지분거래가 매우 활발하여, 투자자의 자금 회수가 용이하다. 투자자가 사회기반시설이 완료되면 최초 투자 지분을 회수하여 재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고, 보통 은행과 건설사가 PFI의 지분을 매도하면 펀드가 이를 매수한다.³³⁾

33)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앞의 논문, 149쪽 - 159쪽

1.3.5 미국의 인프라펀드

가. PPP 시장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주정부가 사회기반시설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별로 다른 민간투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지방정부가 프로젝트 공사를 설립하고, 공사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 후, 투자를 통하여 얻은 수익을 민간부분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PPP 시장의 발전은 더뎠지만, 2000년 이후 주정부들이 재정을 절감하기 위하여 PPP를 활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2006년과 2007년에 일리노이, 버지니아, 인디애나에서 재개발사업이 이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³⁴⁾

현재 25개 주에서 교통, 도로와 관련하여 PPP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아직 한정적이며,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에서 PPP를 활용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나. 미국 연금의 인프라 투자 확대³⁵⁾

미국 연금들은 과거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인프라 투자에 인색하였지만, 최근 들어 인프라 시장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자산 클래스로서 재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플로리다 주연금이 2010년 6월 투자 전략을 개정하면서 인프라 투자를 허용하고, CalSTRS가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반면에, 인

34) OECD, INTERNATIONAL FUTURES PROGRAMME, Pension Funds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A Survey(2011. 9.), 109p

35) OECD, INTERNATIONAL FUTURES PROGRAMME, Pension Funds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A Survey(2011. 9.), 113p

프라를 별도의 투자처로 인식하는데 소극적인 연금도 있다.

이는 현재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는 부동산이나 PE에 투자하는 것보다 위험성이 크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연금이 인프라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연금은 펀드를 이용한 간접 투자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자국 내 투자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예를 들어 TRS의 포트폴리오는 75%를 미국, 20%를 OECD, 5%를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고 있다.

다. 미국 인프라 펀드

미국에서 인프라 펀드는 후발주자로서 맥쿼리 그룹 등의 성공을 벤치마크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골드만삭스는 2006년 USD 65억 달러의 GS Infrastructure Partners I을 성공적으로 설정하였으며, 2010년 USD 31억 달러의 GS Infrastructure Partners II도 설정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맥쿼리도 Macquarie Infrastructure Partners 및 Macquarie Infrastructure Partners II USD 55억 달러를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인프라 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안정적이고 꾸준한 수익이 장점일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에 대한 헷지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라. 펀드 운용 규제

미국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SEC 등록 및 시스템리스크 평가에 필요한 정보 보고를 제외하고 운용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어서

상당히 자유로운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3.6 해외인프라펀드의 투자 특징 및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의 법제와 환경에 따라 그 규제 및 운용 방식, 역사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비교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인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헷지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둘째, 나라마다 해외 투자 비중이 다르지만, 그 원인은 투자 총자금 대비 내수 시장 환경에 달려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내수 시장이 한계에 부딪혀 있고, 건설사의 경쟁력은 높은 편이어서, 건설사와 함께 패키징화 하여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시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셋째,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뉠 수 있는데, 주로 초대형 연금 등이 직접투자를 선호하고 있고, 운용 자금의 규모가 작은 중형이하 연금 등은 인프라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인프라에 대한 투자 경험이 풍부하지 못하고, 전문 인력이 적으며, 해외 연금 등에 비하여 규모가 작은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적인 투자 방식이 유효한 시점이다.

넷째, 해촉법의 개정으로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과거보다 적극적인 해외 인프라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졌고, 코리아해외인프라펀드(KOIF) 등도 설정되어 일정 규모 이

상의 투자 자금도 확보된 상황이다.

따라서, 해외 인프라 투자가 저금리, 저성장 기조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세제 혜택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의 사례에 비추어 펀드 운용과 관련한 규제 완화와 규제 기관의 일관성 및 예측 가능한 정책 기조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1.4 해외건설특화펀드의 도입 필요성

1.4.1 해외건설 관련 사업방식에 따른 금융투자현황

1.4.2 건설산업의 구조개편 및 해외 진출

가. 건설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구조조정 필요성

국내총생산(GDP)에서 국내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명목 기준)은 한때 10%에 육박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크게 떨어지고 있다.

2014. 12. 15. 한국은행이 공표한 ‘국민계정 개편 결과’ 보고서의 산업구조를 보면, 국내 경제에서 건설업의 비중은 1953년 2.2%를 보인 후 꾸준히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1990년 9.5% 까지 올랐으나, 2000년에 6.0%, 2013년에 5.0%까지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토목과 건축을 중심으로 한 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건설업의 GDP 비중이 점차 줄어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아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은행이 2015. 6. 4. 발표한 “2014년 국민계정(잠정)의 주요 내용” 중 건설업의 성장률관련 자료에서도 토목건설이 교통시설과 일반토목시설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1> 건설업의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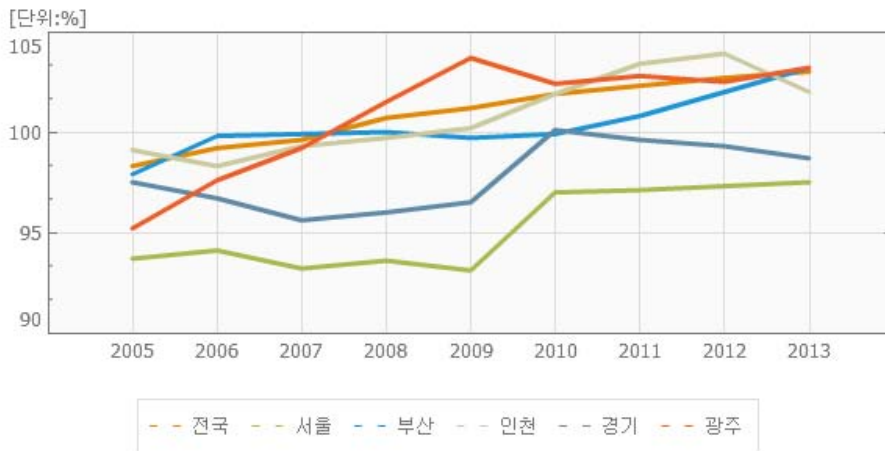
(전기대비, %)

	2012	2013	2014 ^p				
			연간	I	II	III	IV
건설업	-1.8	3.0	0.6	1.4	0.1	0.9	-3.0
건물건설	-0.2	9.1	4.6	0.3	1.8	0.7	-0.3
주거용	5.6	17.6	9.6	5.3	2.1	-3.0	-0.4
비주거용	-3.5	3.9	1.0	-3.3	1.7	3.7	-0.2
토목건설	-3.6	-3.7	-5.3	3.4	-2.6	0.7	-7.0

*한국은행 2014. 국민계정(잠정) 주요 내용 보고

이와 같이 국내건설업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토목 건설 등의 분야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는 주된 원인은, 아래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전국 주택보급률이 2008년 이래 계속해서 100%를 상회하는 등 국내 건설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국내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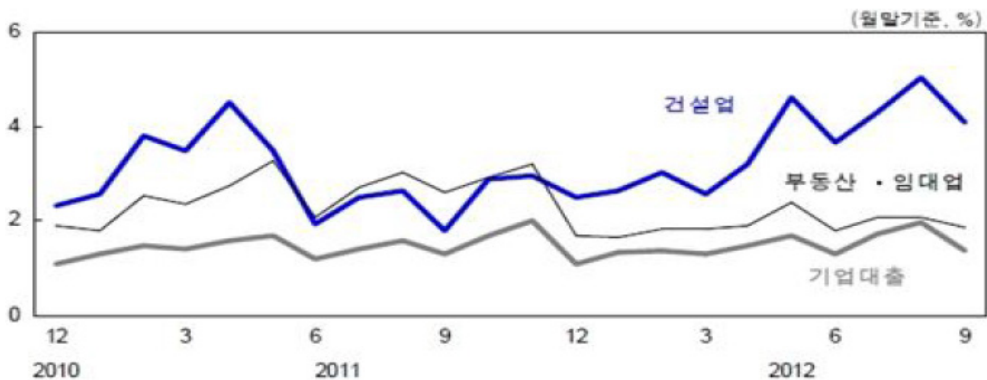
<그림 8> 신 주택보급률(연도별)



*출처: 국토교통부

그 결과, 2010년 말 이후에만 7개 중견건설사가 경영난 등으로 위크아웃,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등 100위 이상 중·대형사 중 29개 업체가 부실화 평가를 받아³⁶⁾ 건설업의 경기침체가 심각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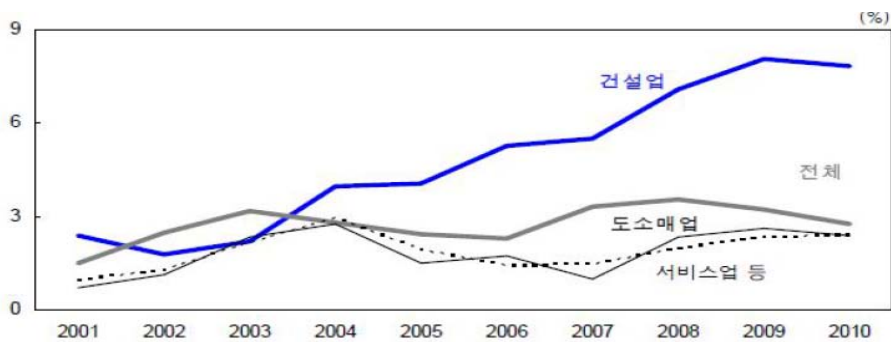
<그림 9> 주요업종별 기업부도율



*금융투자협회; KDI 경제전망(2012년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전망 및 ‘건설 부문 재무안정성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건설기업의 부도율이 2004년 이래 현저히 높아지고 있고, 대출 및 연체율 또한 2010년 이래, 다른 기업 대출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 기업대출 및 건설부문 연체율 추이



* 금융투자협회; KDI 경제전망(2012년 하반기)

36) 관계부처합동 2011. 5. 1. 발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건설경기의 침체는 건설기업에게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건설기업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서민의 삶까지 위협받도록 한다. 실제로 건설업계의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3,031억원으로 전체 업종 체불액의 23%를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30.7%)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그리고 건설업 임금체불액은 2010년 1463억원에서 지난해 3031억원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줄어든 적 없이 상승하였다³⁷⁾. 특히, 아래 <표 12,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기업이 구조조정을 통해 약 53.3%의 인력을 구조조정 하였는데, 이는 심대한 국가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12> 법정관리 중 임금체불 발생사례

회사명	기 간	체불기간
성원건설	2009년11월~2012년 1월	최장 10개월(노사 협의를 통해 50% 금액 지급으로 합의)
벽산건설	2009년 2월~2012년 6월	최장 6개월
남광토건	2010년 8월~2012년 6월	최장 4개월
우방	2008년10월~2012년 2월	최장 8개월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기업회생관련법 개정 필요성”, (2012. 10.)

37) 건설경제 2015. 2. 22.자 기사 “임금체불 사업주 정부공사 입찰 불이익 준다.”

<표 13> 법정관리 건설사 인력 구조조정 사례
(단위:명, 가맹노조)

회사명	위기발생	법정관리 신청시기	위기 발생 전 직원 수	현재 직원 수 (2012.12)	인력조정 인 원
벽산건설	2010	2012.6	600	270	330
풍림산업	2009	2012.5	1,000	650	350
남광토건	2010	2012.8	500	330	170
우림건설	2009	2012.6	400	140	260
성원건설	2009	2010.3	700	40	660
LIG건설	2011	2011.3	310	210	100
합 계			3,510	1,640	1,870
비 율			100%	46.7%	53.3%

*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연합, “기업회생관련법 개정 필요성”, (2012.10)

위와 같이 건설업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5.0% 내외로 하락했음지라도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경기안정, 일자리 창출 등 국가기관 산업으로서 역할을 담당해 왔고, 타 산업으로의 생산유발효과가 매우 크며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취업계수가 크고, 타 산업에 미치는 취업유발효과 역시 크기 때문에 건설기업의 부도가 이어지는 등 지속되고 있는 건설업의 침체가 국가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는 매우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건설투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IT·금융 등의 기반이 취약한 지방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고,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임금체불·일자리 감소의 가장 직접적 피해계층은 일용직 일자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서민층이 될 우려가 있다. 또한 건설사들의 연쇄부실화는 주택공급기반을 약화시키면서 저축은행은 물론 금융권의 동반부실화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에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1년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합동하여 발표한 바 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원활화, 민자사업 활성화 등을 그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표 11, 건설업의 성장률 추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대책을 발표한 2011년 이래 2013년까지도 건설업의 GDP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건설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어 여전히 침체된 건설경기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이러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이 국내 대책으로만 일관하는 경우 가계부채가 심각한 경제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조장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과거지향적인 토건 경제 재건에 집착한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또한, 건설경기가 침체됨으로써 국내 건설업의 자금력, 기술력, 노하우 등 그 동안 건설업 발전과정에서 축적된 인적·물적 자원이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더 이상 활용되지 못하고 유실되고 있다는 문제점 또한 크다.

따라서,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건설경기 시장에서의 획기적인 발전 방안은 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새로운 건설산업 발전 방안으로서, 성장단계에 있는 해외건설 시장³⁸⁾으로 눈을 돌려 건설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38) 특히 국토교통부의 ‘해외건설 1천억불 수주시대 준비를 위한 13년도 해외건설 추진계획’에 따르면, 국내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건축·토목 분야가 해외에서는 최근 쿠웨이트 수비아 해상대교(20.6억불), 이라크 신도시(77.5억불) 등의 수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등 침체된 건설 분야에 대한 해외진출에 집중함으로써 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외 건설 산업의 성장시키기 위한 국가적, 제도적 지원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해외건설 시장 진출은 경제적 자원 활용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국가 경제 전체의 침체상황을 탈피하고 고용을 증대시키는 등 국가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는바, 이는 식량 안보 차원에서 해외 농업을 개발한다거나 자원 확보 차원에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에 비하여 공익적인 목적이 미약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기 입법된 해외농업개발이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각종 국가적, 제도적 지원 장치가 같이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추가(개정)할 필요가 있다.

나. 해외 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필요성

세계 건설시장 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 업체에 개방되는 해외 건설시장도 지역별 편차가 있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반해 국내 건설시장은 경기악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침체상태가 계속되면서 한국 건설기업들은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건설협회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협력하여 제출한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 교과과정 및 인증기준 개발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해외 건설시장 규모는 전체 세계 건설시장 규모의 약 8% 수준(약 7,000억불)으로 추정되며, 2007년 대비 2013년에 세계 건설시장 규모가 33% 크게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세계 건설시장 규모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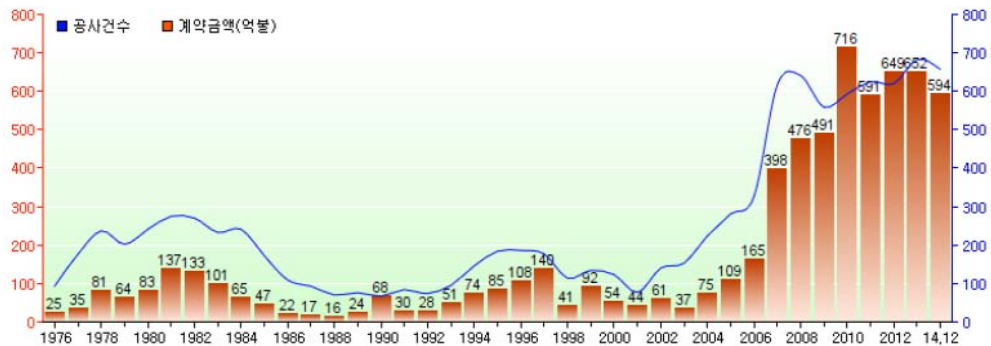
(단위:조불)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현황과 진출확대전략(2014)

한국 건설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은 <그림 11>에서 보듯이 2010년에 사상 최고액인 716억불의 수주액을 달성했으며 이후에도 3년 연속해서 500억불 이상의 수주고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12> 해외건설 수주 현황



*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2014)

비록, 2014년 하반기부터 저유가가 지속되어 2015 상반기의 수주 활동이 다소 주춤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에도 경상수지에서 건설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9%를 상회(2015. 6. 1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5년 4월 기준 경상수지 81.4억불 흑자, 건설수지 7.4억불 흑자)하는 등 여전히 국가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라크 및 리비아 등의 중동지역 정세불안과 우크라이나 사태, 서아프리카 지역의 에볼라 확산 등 일련의 시장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건설기업들이 해외 건설시장 진출에 매우 적극적인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해외 수주실적은 지금까지와 같은 고성장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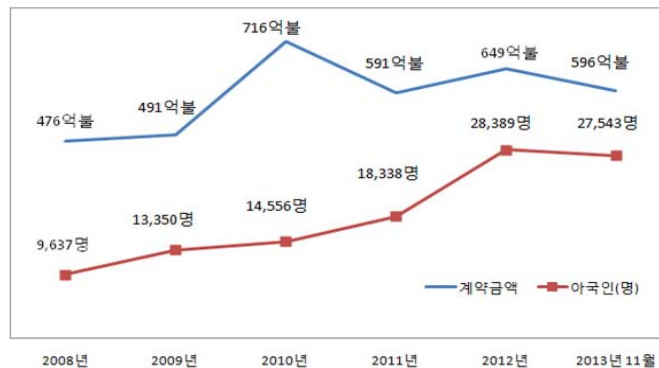
또한 국내 건설기업의 해외 건설시장 진출에 따라 필요한 인력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해외건설협회는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14> 해외건설 인력증가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2012	
인력 전체	전 체 (진출인력: 명)	163,449	184,017	190,072	232,627	
우리 나라 인력	소계 (아국인력: 명)	13,350	14,556	18,338	23,902	
	직능별	관리·기술 직	9,599	10,740	12,755	17,188
		기능직	3,751	3,816	5,563	6,714
	지역별	중동	7,501	8,809	11,663	16,012
		아시아	3,776	3,904	4,766	5,900
		북미, 태평양	83	109	397	514
		유럽	312	152	120	68
		아프리카	1,293	879	626	771
		중남미	385	703	766	637
		공종별	토목	2,705	3,171	3,412
	건축		2,565	2,112	1,743	2,998
	산업설비		6,538	7,525	11,200	14,795
	전기		715	738	975	1,188
	통신		20	55	184	205
	용역		807	955	824	894

* 해외건설협회, 내부자료(2013)

<그림 13> 연도별 해외건설 수주 및 우리나라 인력진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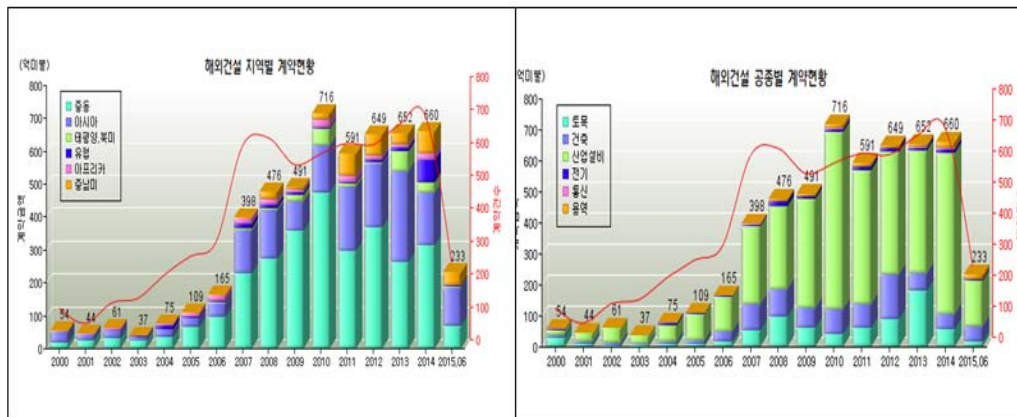


* 국토교통부, 정책마당 (해외건설 수주·인력진출)

그러나 이와 같이 해외건설시장으로의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건설경기 회복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치열해지는 수주경쟁 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그림 1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동시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수주구조는 오랜 기간 갖은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14> 대한민국 해외건설 지역별/ 공종별 수주현황



*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보도자료

또한 <그림 15>에서 보듯이 2000년대 들어서 지나치게 편중되고 있는 플랜트 공종의 수주비중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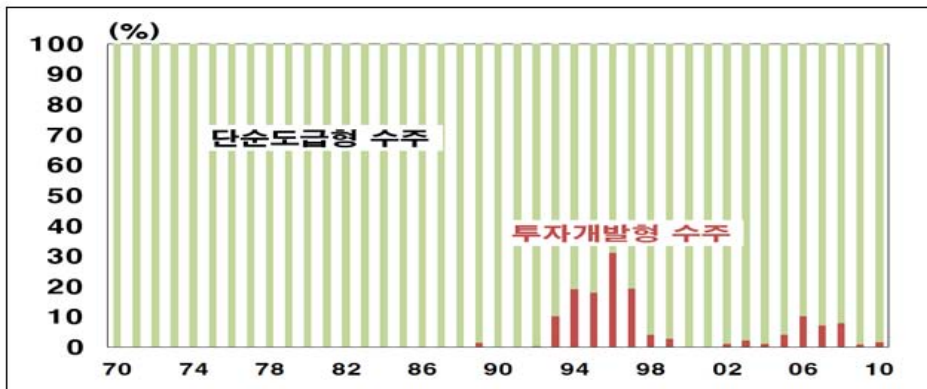
<그림 15> 공종별 수주구조 비교



* 주: 세계는 ENR(05~09년 평균), 우리나라는 해외건설협회(05~10년 평균) 기준
출처: ENR, 해외건설협회

그리고, 항만·도로·신도시 개발 등 투자개발형 공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은 단순도급형 공사의 2배 수준이어서 미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투자개발형 사업 수주비중이 65%~75%를 차지하고 있는 등 최근 세계건설시장이 단순도급형 공사에서 투자개발형 공사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단순 도급형 공사가 대부분이어서(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10년 기준 98.3%). 투자개발형 공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고부가가치를 거의 향유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림 16> 발주형태별 해외건설수주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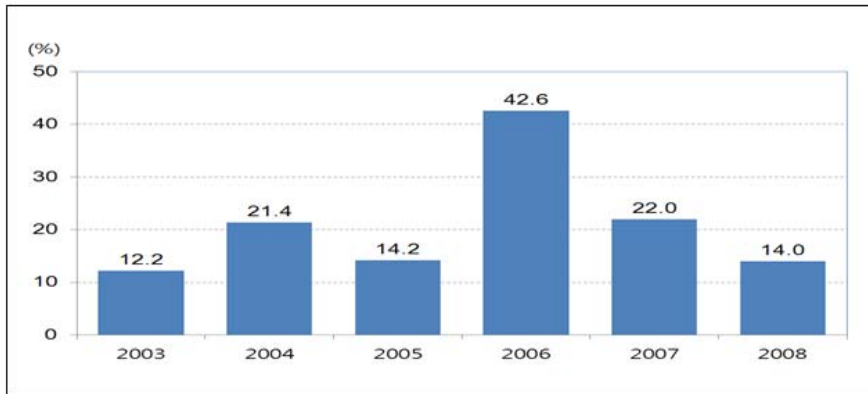


* 주: 단순도급형은 발주형태별 공사 중 공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의 합계
출처: 해외건설협회,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2015. 6. 보도한 해외건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자원연계 개발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해외건설수주 확대에 노력하고,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2000년 5.5억달러에서 2005년 9.1억달러, 2009년 19.5억달러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단순도급형 공사에서 우리나라를 추월하고 있다. 중국에게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뒤지는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개발형 사업으로의 전환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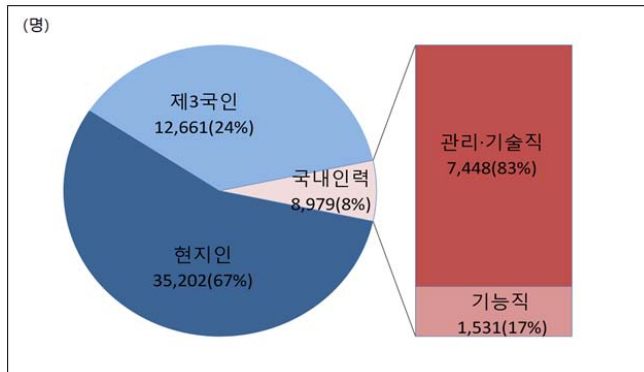
또한 우리나라 해외 건설 사업의 또 다른 문제점은 기자재·인력·엔지니어링 등을 해외에 의존함에 따라 외화 가득률이 크게 낮다는 점이다. 국산 기자재 사용비율이 20% 내외에 불과하며 건설인력도 현지인 및 제3국인이 현장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7> 해외 플랜트의 국산기자재 사용비율



* 출처: 국토교통부(2009. 7.)

<그림 18> 해외건설사업의 인력구성



* 주: 2009년 상반기 기준, 출처: 해외건설협회

마지막으로, 설계·감리 등 엔지니어링 부문은 국내 건설업체의 원천기술 부족으로 유럽·미국 등 선진국에 크게 의존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2009년부터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시장점유율(매출액기준)은 0.5%에 불과하여 중국(3.9%)에 비해서도 낮은 상황이고 갈수록 차이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5> 국가별 해외건설 엔지니어링 매출 현황

(억달러, 개, %)

	미국	캐나다	유럽	호주	일본	중국	한국	기타	계
해외매출	181.7	39.7	203.0	37.8	12.8	20.5	2.7	26.2	524.4
(점유율)	(34.6)	(7.6)	(38.7)	(7.2)	(2.4)	(3.9)	(0.5)	(5.0)	(100.0)
업체수	70	8	61	8	12	21	6	14	200
(비 중)	(35.0)	(4.0)	(30.5)	(4.0)	(6.0)	(10.5)	(3.0)	(7.0)	(100.0)

* 주: 2009년 기준, 출처: ENR The Top 200 International Design Firms

이와 같은 해외 건설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위험요인들을 차단하고 갈수록 커지는 세계 건설시장에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목표와 같이 세계건설 5대 강국에 진입하려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목적으로 해외건설촉진법령이 1975. 12. 31.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펴본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3년에 해외건설 5대강국 진입('13 700억불 -> 17 1천억불 수주)을 위해 수주확대 및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표 16>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진흥계획(2010~2014년) 주요과제

추진분야	중점 추진과제
1. 기업의 수주경쟁력 제고	1-1. 플랜트 건설 수주경쟁력 강화 1-2.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공동 진출 활성화 1-3. 해외 투자개발형사업 참여 활성화
2. 해외건설 지원체제 강화	2-1. 해외건설 정보 네트워크 강화 2-2. 해외건설 정책개발 기능 강화 2-3. 해외공사 금융 지원 강화 2-4. 해외건설 진출 인센티브 강화
3. 해외건설 관리체계의 선진화	3-1.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민간자율 조정체계 확립 3-2. 해외건설 인력확보 지원 3-3. 해외건설 통합리스크 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4. 해외건설 수주기반 확대	4-1. 해외건설 신시장 개척 지원 확대 4-2. 해외건설 지원외교 확대 4-3. 중소기업연합체 해외진출 활성화
5. 해외건설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5-1. 국산 기자재 활용 확대 5-2. 녹색성장 부문 진출 활성화 5-3. 한국형 도시개발 모델의 해외진출 확대 지원 5-4. 해외 CM시장 진출기반 확대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외건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제도적, 입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투자개발형 사업은 사업대상 발굴·조사비용 등 사업 초기 단계부터 막대한 자금의 소요가 요구되고 사업위험이 높아 전문적인 투자구조화를 위한 전문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특징을 갖고 있는바,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하여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보조, 필요자금 융자, 해외 진출 희망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의 현지 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 금융자문 및 조세 특례규정 등의 도입이 국가적, 제도적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 해외 건설 사업에 대한 입법적 지원 필요성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내 수요부족, 투자 부족 등의 요인으로 국내건설업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해외시장으로 진출이 필수적인 상황인데, 현 해외시장 진출 지역은 중동 편향적이고 고부가가 치영역인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행정적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국내가 아닌 해외를 배경으로 한 사업진출과정에서, 건설기업에게는 자금조달, 회사설립 등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고, 특히 해외사업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자본시장법 등 국내 관련 법령 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행정적 차원이나 기업적 차원에서의 문제해결은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따라서, 입법적, 제도적 지원이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취지로 제정된 해외건설촉진법이 시행 중에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 규정은 미흡하여 추가적인 입법(개정)이 필요한 것이다.

입법적 지원 필요성 및 입법(개정)되어야 할 사항의 측면에서, 해외건설사업과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 및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해외 농업, 산림자원개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을 입법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는, 해당 법규의 제정이유에 나와 있듯이 불안정한 국제곡물가격에 대한 대응, 국내 농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라는 공익실현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지원규정의 구체적 내용은 해당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사업에 있어서 자금조달의 어려움, 초기 진입장벽의 존재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설립,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 조사 및 투자

비 지원, 해외농업개발협회의 설립, 국제농업협력사업의 지원 등으로 구성한 것이다.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도 해외 건설에 대한 필요 인력이 증가하고 실제 진출 인력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표 14, 그림 13) 국내 건설 노동인구의 해외 건설로의 유입을 통한 실업 방지, 국내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축적된 경쟁력 있는 건설 기술력을 해외 건설에 활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 특히 외화가득률의 증가, 확대되고 있는 세계건설시장 규모(그림 11)에 비추어 단기적이 아닌 장기적 국가 수익원의 확보 등 단순히 건설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 발전과 노동시장 상황 개선에 상당한 공헌이 기대되므로 이는 국가적 차원의 공익실현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고부가가치의 투자개발형 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는 관련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는 동시에 해외사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내금융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상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 경제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할 때, 해외 건설 사업에 국내 기업 및 국내 자본이 활발하게 진출하기 위해서는 금융 관련 규제 개혁 등 행정 입법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1.4.3 해외 SOC 사업을 통한 유무형의 이익

가. 저평가된 한국 국가 브랜드가치

해외 건설 사업 특히, 각 국가의 산업 발전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

즉,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는 사업에 국내 기업이 진출하는 경우 한국의 국가이미지 개선 및 국가 브랜드가치 향상과 같은 무형의 가치 창출 효과도 부수적으로 가져 올 수 있다.

해외 인프라 건설에 대한 투자는 그러한 투자가 피투자국의 경제 발전의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러한 국가들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라는 점에서 피투자국의 현지인들에게 한국을 자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국가로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의 경제 발전 및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강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국가이미지 향상,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 및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제고를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1896년 독일의 Earnest Williams가 상품에 「Made in Germany」 로고를 사용하여 국가이미지를 해외마케팅에 처음으로 활용한 이래 국가이미지는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시키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으로 작용하여 왔다.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구매 및 사용 경험이 없을 때 국가브랜드는 기업과 제품에 대한 지각을 결정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브랜드는 통화 안정성 증가, 국제 신용과 투자자 신뢰확보, 국제 신용등급형성, 국제 정치력 강화, 브랜드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 신장, 외국인의 국내관광과 투자증가, 국제 협력체제 강화, 국가 자신감 회복, 환경과 인권 문제에 관한 부정적 시각 해소, 부채와 편파에 대한 논란 일소, 세계 시장 접근의 용이 등의 경제적 측면 이상의 효과를 지닌다.³⁹⁾

39) 해외 주요국의 국가 브랜드 관리 사례 연구, 신철호 외 2인, 2010.6.

이에 국가인지도가 높은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도국들도 경쟁적으로 국가이미지 제고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국가브랜드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가 전략적으로 국가이미지를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브랜드가치는 세계 15위의 경제규모에 비해 크게 낮은 실정이다. GDP 대비 국가브랜드 가치가 미국은 143%, 일본은 224%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30% 미만으로 저평가되고 있다.⁴⁰⁾

또한 국가브랜드지수 모델 SERI-PCNB NBDO 조사결과, 총 50개국 중 한국의 실체는 13위, 이미지는 17위에 해당하여 실체보다 이미지가 낮은 순위를 보였다.⁴¹⁾

이러한 국가브랜드 가치 저평가 현상은 한국산 상품가격에 영향을 미쳐 모든 면에서 동일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미국산에 비해 66%-67% 수준으로 가치가 평가 절하(Korea Discount)되고 있는 상황이다.⁴²⁾

<표 17> SERI-PCNB NBDO 국가브랜드 종합 순위

[표1] SERI-PCNB NBDO 국가브랜드 종합 순위

2012년 순위	SERI-PCNB NBDO						대표적인 경쟁력지수					
	실체			이미지			IMD		WEF		NBI	
	국명	2011년	2010년	국명	2011년	2010년	국명	2011년	국명	2011년	국명	2011년
1	미국	1	1	미국	3	4	홍콩	1	스위스	1	미국	1
2	독일	2	2	독일	2	1	미국	1	싱가포르	2	독일	2
3	프랑스	3	4	영국	5	5	스위스	5	핀란드	4	영국	3
4	영국	5	3	일본	1	3	싱가포르	3	스웨덴	3	프랑스	4
5	일본	5	5	스위스	9	6	스웨덴	4	네덜란드	7	캐나다	6
6	스위스	6	6	스웨덴	7	8	캐나다	7	독일	6	일본	5
7	호주	7	7	캐나다	4	2	대만	6	미국	5	이탈리아	7
8	스웨덴	8	8	프랑스	6	7	노르웨이	13	영국	10	스위스	9
9	네덜란드	10	10	호주	8	10	독일	10	홍콩	11	호주	8
10	캐나다	9	9	네덜란드	11	11	카타르	8	일본	9	스웨덴	10
※ 비교	한국(13위)	15	18	한국(17위)	19	19	한국(22위)	22	한국(19위)	24	한국(N.A.)	27

출처 : 2012 국가브랜드지수 조사 결과(삼성경제연구소, 2013년 1월)

40) 소득 2만 달러 시대, 한국의 국가브랜드 현황, 현대경제연구소, 2008. 4. 28.

41) 국가브랜드 조사 결과, 삼성경제연구소, 2013. 1. 10.

42) 08 국가브랜드 맵 작성연구, KOTRA, 2008.

나. 한국 브랜드가치 저평가의 원인과 해결책

이처럼 한국 브랜드가치가 저평가되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국가브랜드위원회가 2008년 실시한 한국 국가브랜드 저평가 이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4.1%(복수응답)가 국제사회 기여 미흡을 꼽아 두 번째로 높았다.⁴³⁾



한국 국가브랜드 저평가 이유 및 가치 제고 방안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브랜드위원회는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활동을 국가브랜드가치 향상을 위한 5대 역점분야 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는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에 관여하는 국제기구)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하여 개도국 또는 국제기구에 공여하는

43) 한국 브랜드 가치 왜 낮을까?, 국가브랜드위원회, 2009.03.17.
<http://www.korea.kr/policy/mainView.do?newsId=148663974>

증여(Grant, 무상원조) 및 양허적 성격으로 제공하는 차관(Concessional Loan, 유상원조)을 의미한다.

공적개발원조는 국가의 이익과 번영을 위한 국제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중심적 국가 전략 행위로서 부각되고 있다. 즉, 한 국가의 성장과 번영은 국제사회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에 달려있으며, 국제환경에서 대외원조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고 저개발국과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키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대외원조는 국가의 연성국력(soft power)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⁴⁴⁾

공적개발원조는 수혜국 내에서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국가이미지를 획득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는 효과를 가져온다.

노르웨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조노력 지원’을 통하여 ‘인도주의 초강대국(Humanitarian Superpower)’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였으며, 외교역량을 강화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對베트남 3위 공여국인 덴마크는 ‘코펜하겐 기후협약’에서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의 적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다.⁴⁵⁾

최근 주요 선진국들 역시 원조확대를 통해 개도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이미지 개선과 지지세력 확보를 도모하고 있다. 인도적 외교적 목적 이외에 원조를 활용한 자국기업의 해외진출 및 시장 선점 등 경제적 목적을 강력히 추구하는 것이다.

2003년 기준 일본의 대아시아 유상원조는 52.9억 달러로 0.9억 달

44) 공적개발원조가 국가브랜드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유경 외 1인, 2009.

45) 국격 제고를 위한 ODA 정책, 삼성경제연구소, 2009.

<http://sisanewszone.co.kr/news/article.html?no=37>

러인 우리나라의 56배 수준이며, 중국도 인니에 3억 달러, 베트남에 2억 달러의 유상원조를 하는 등 원조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⁴⁶⁾

다. 공적개발원조(ODA)의 한계와 그 대안

이처럼 공적개발원조는 국가와 국가 간의 장기·지속적이고 호의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실체적 활동으로서, 수혜국 국민들로 하여금 공여국에 대한 호의적인 인식과 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써 공여국의 브랜드가치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한국은 1945~1999년 기간 총 128억 달러의 공적개발원조 지원을 받았으나 해외원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40억달러에 불과하여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기여도는 0.7%에 그쳤다.

이에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OECD 회원국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적 평가를 받아온 바⁴⁷⁾,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국가이미지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공적개발원조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공적개발원조는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공적 개발원조의 규모 증대는 국민적인 지지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경제 불황의 시기에는 정부 역할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는 반면에,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외국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기 어렵다.⁴⁸⁾ 또한 국가의 예산만을

46)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金融인프라 海外輸出戰略, 재정경제부, 2006. 6.

47) 국격 제고를 위한 ODA 정책, 삼성경제연구소, 2009.

<http://sisanewszone.co.kr/news/article.html?no=37>

공적개발원조의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가 스스로에게도 커다란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인프라건설 사업에 투자하는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은 정부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를 민·관 공동투자 펀드로 구성하면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국제사회 기여 및 국가이미지 제고라는 공적개발원조의 효과는 동일하게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적개발원조는 증여, 차관, 인프라 지원 등 다양한 수단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 증여나 차관은 유형의 시설물이 남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해당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효과가 인프라 지원에 비하여 미미하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국가이미지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서 수행하는 도로, 철도, 발전소, 고속철도 등 공공시설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이므로 장기적·유형적 시설물이 남는다는 측면에서 명확한 국가이미지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일본과 중국은 아시아 신흥국가들에 대한 인프라투자를 통한 국가 이미지 개선 및 국제적 영향력 향상 효과에 주목하여 이에 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ADB(Asian Development Bank, 아시아개발은행)는 최근 향후 10년간 아시아 개도국의 인프라 수요는 연간 7,760억 달러, 총 8조 5,4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⁴⁹⁾

이에 중국 및 일본 등은 아시아 국가에서의 정치, 외교, 경제 주도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아시아의 신흥국가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48) 신정부의 기여 외교: 공적개발원조(ODA)의 과제와 전망, 강성주, 2008.

49) 중-인프라 수출 강자로 부상, 이투데이, 2010.10.29.

이러한 협력의 주요 창구로서 신흥국가들의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지역 진출을 위한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경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개발 프로젝트가 메콩강 유역 개발 사업이다. 중국은 인도차이나 반도를 중심으로 남북 및 동서 교통망의 구축, 전력, 항만 등 인프라 건설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미 약 250억 달러에 달하는 ASEAN 기금까지 설립해 놓은 상황이다. 이에 맞서 일본도 약 55억 달러에 달하는 ODA 지원금을 확보해 아시아 지역에서의 인프라 개발 경쟁에 나서고 있다.

최근 중국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설립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도 해외 인프라 투자를 통한 국가이미지 개선 및 브랜드가치 제고라는 목적이 자리 잡고 있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중국 주도 하에 아시아 국가들의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사회간접자본 건설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구이며, 일대일로 사업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를 경유하는 철도와 고속도로, 송유·가스관 등을 놓는 한편 해상 무역로 등을 확대한 사회간접자본 네트워크 건설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중국은 AIIB 제안 및 일대일로 사업을 국제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한 경제성장의 시너지 및 동력을 창출하는 모델로 표방하고 있으며, 이를 “중국의 꿈(中國夢)”과 “세계의 꿈(世界夢)”의 결합이라는 표현으로 선전하고 있다.⁵⁰⁾

이처럼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해외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우리의 자금 및 기술력을 동원하는 것은 개발도상국 국민들에게 단

5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추진하는 중국의 속내, 지만수, 2015. 2.

순히 편익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Built by Korea”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한국의 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단순히 산술적 이익에만 국한하여 계산하여서는 안 된다. 한국의 국가이미지 제고는 나아가 국가의 경제 발전 및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강화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공적개발원조에 비하여 훨씬 적은 비용으로 공적개발원조의 긍정적 효과를 동일하게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이처럼 해외 인프라 투자에서 발생하는 장기적 효과는 실로 엄청나며, 일본,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도 이러한 효과에 주목하여 해외 SOC 건설에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다. 우리 정부 역시 이러한 움직임이 발맞추어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정부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1.4.4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금융투자상품 개발 필요성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연기금, 기관 투자자들의 주요한 투자 부문이었던 주식 및 채권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은 기금운용의 성과를 안정적으로 제고하고 투자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인프라, 부동산 등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중을 확대하는 경향에 있다.⁵¹⁾

우리나라는 내수 증가세가 둔화 되어 해외 시장의 개척이 필요하고, 금융 산업 또한 국내 총생산대비 부가가치 비중이 2012년 기준

51) 노상윤, 「국민연금 글로벌 부동산 및 인프라 투자확대의 필요성 및 다각화 방안」, 『국민연금 바로알기』(2015-제5호), 2쪽

6.7%로 OECD 회원국 평균치(6.5%)를 상회하므로 국내에서 금융 산업의 추가적인 양적 성장은 쉽지 않거나 지나친 부채 증가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외투자·진출이 필요한 단계에 이르렀다.⁵²⁾ 이에 따라 최근 국내 기관투자자들도 해외 인프라 펀드에 투자하는 비중을 늘리고 있다.⁵³⁾

OECD 금융 보고서⁵⁴⁾에 따르면 기관 투자자들의 전체 투자 중 인프라에 대한 투자 비중은 해당 기관이 인프라를 독립적인 투자방법으로 인식할수록 높고, 대체 투자 중 일부 또는 기타로 취급하는 경우엔 그 비율이 낮거나 투자처로 인식하지 않아 비중이 낮지만,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 자체의 증대⁵⁵⁾ 및 투자 비중 확대는 세계적인 트렌드⁵⁶⁾이다.

특히 2010-2012년 세계 공적 연기금(PPRFs) 자산배분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은 채권과 주식의 투자를 줄이는 대신 대체자산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인프라와 사모투자의 확대가 두드러진다.⁵⁷⁾

연기금들은 인프라 투자경험이 증대할수록 인프라 투자를 연기금의 장기투자 속성에 부합되는 독립적인 투자군으로 인식하고, 인플레이션의 헷징, 전통적 자산군과의 낮은 상관관계로 인하여 수익의 변동성 및 비체계적 위험의 축소 요소로 활용하여 아래 <그림 19>와 같이 대체투자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다⁵⁸⁾.

52) 송경희, 「일본 금융기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와 시사점」, 『주간 금융경제동향 제4권 제34호』(2014. 8. 27.), 6쪽 - 9쪽

53) KB자산운용, 2,000억 원 규모 북미인프라펀드투자(한국경제, 2015. 5. 27.), 과학기술인공제회 올해 말까지 해외 에너지·인프라 등에 4,000억 원 투자(서울경제, 2015. 5. 15.)

54) OECD Working Papers on Finance,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 No. 29(2012),

55) NBIM(노르웨이 국부 펀드), Discussion note, 2013-2

56) OECD Working Papers on Finance, Insurance and Private pension No. 36(2013), 9쪽 - 10쪽

57) 노상윤, 「글로벌 공적 연기금의 자산운용 동향 및 시사점」, 『연금 이슈 & 동향 분석』(2014-제1호), 3쪽 - 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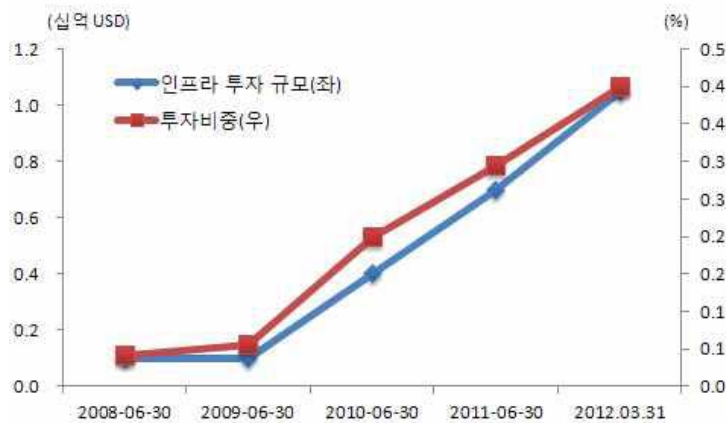
58) 최영민, 「해외 연기금의 인프라 투자동향과 시사점」, 『연금 이슈 & 동향 분석』

구체적으로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과 캐나다 국민연금(CPPIB)의 인프라 투자 규모 및 비중은 각각 <그림 20>, <그림 21>와 같다.

<그림 19> 2005-2011년 글로벌 운용자산 규모(Strategic Insight, “Global Fund Review”(2011)(단위: 조 달러(USD))



<그림 20> CalPERS 인프라 투자규모 추이(CalPERS Comprehensive Annual Financial Report)



(2013-제5호), 1쪽 - 4쪽

<그림 21> CPPIB 인프라 투자규모 추이(CPPIB Annual Report)



최근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한국 퇴직연금 시장의 수익 제고를 위하여 해외 분산 투자와 해외 대체투자가 필수이고, 특히 인프라 투자는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수라고 강조하였다.⁵⁹⁾

호주는 일찍이 대체투자 및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Australian Future Fund의 투자 비중 항목엔 대체투자와 별도로 인프라 투자 항목이 있고, 그 배분 비율은 아래 <그림 22>와 같다.

또한 Future Fund는 2009년부터 Nation-building Funds를 따로 두어 Building, Education, Health and Hospitals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를 보유하고 있다.⁶⁰⁾

59) 이투데이, 2015. 6. 1. 기사

60) Future Fund, Portfolio update at 31 March 2015, 3쪽, 2015. 3. 31. 기준 각각 3.59십 억 호주 달러(AUD), 3.73십 억 호주 달러(AUD), 1.78십 억 호주 달러(AUD)를 투자 중이다.

<그림 22> Future fund 자산 배분 현황(2015. 3. 31. 현재)

Future Fund asset allocation		
Asset class	31 March 2015	
	A\$ million	Percentage of Fund
Australian equities	9,618	8.2
Global equities		
Developed markets	24,345	20.8
Emerging markets	11,077	9.5
Private equity	11,274	9.6
Property	7,227	6.2
Infrastructure & Timberland	7,942	6.8
Debt securities	11,576	9.9
Alternative assets	16,069	13.7
Cash	17,834	15.2
TOTAL	116,964	100

Data may not sum due to rounding

호주에는 위 펀드 외에도 총 1,700조 원 규모의 연금이 조성되어 있고, 인프라, 해외 대체투자에 적극 사용하여 2013년 수익률이 13.7%에 달한다.⁶¹⁾ 또한 이러한 인프라 자산의 투자는 호주, 캐나다, 영국 등의 사례에서 비교 대상 투자보다 수익률이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⁶²⁾

국내 채권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던 일본도 2013. 11. 20. 운용수익률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하여 국내 채권을 줄이는 대신 부동산투자신탁, 부동산, 인프라, 사모주식 등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다변화 할 것과, 해외 자산의 운용비율도 늘리라는 제안 등을 받은 바 있다.⁶³⁾

61) 이투데이, 앞의 기사

62) NBIM, 앞의 보고서, 13쪽 - 18쪽, 다만 국가의 투자 유인, 당시 경기 등의 요인들에 의한 결과일 수 있음을 경계하여야 한다고 한다.

63) 황정욱, 「최근 해외 주요연기금의 기금운용 개선동향 및 시사점」, 『연금 이슈 & 동향 분석』 (2014-제2호), 1쪽 - 4쪽

따라서 우리나라도 경제 발전 단계에 따른 투자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금융 유희 자금의 해외 진출 및 연기금의 고갈 방지를 위하여, 국내보다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으면서도, 보다 안정적·장기적인 투자의 포트폴리오 중 하나로 인프라 펀드에 주목하고 그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1.5 해외건설특화펀드의 기대효과

1.5.1 풍부한 민간 유동자금 유입

2000년대 초반 IT 버블붕괴로 미국의 경기가 악화되고, 9.11 테러 등으로 투자심리마저 위축되자 미국정부는 저금리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후 글로벌 경기의 호조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미국 정부는 저금리 정책을 종료하였다.

저금리 정책의 종료로 인해 특히 저신용등급 차주들이 주를 이루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Sub-prime Mortgage Loan)이 부실화 되며, 미국의 대형 금융회사와 증권회사가 파산하였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의 여파는 미국 내에서 그치지 않고 전세계적인 신용경색을 가져왔으며, 그로 인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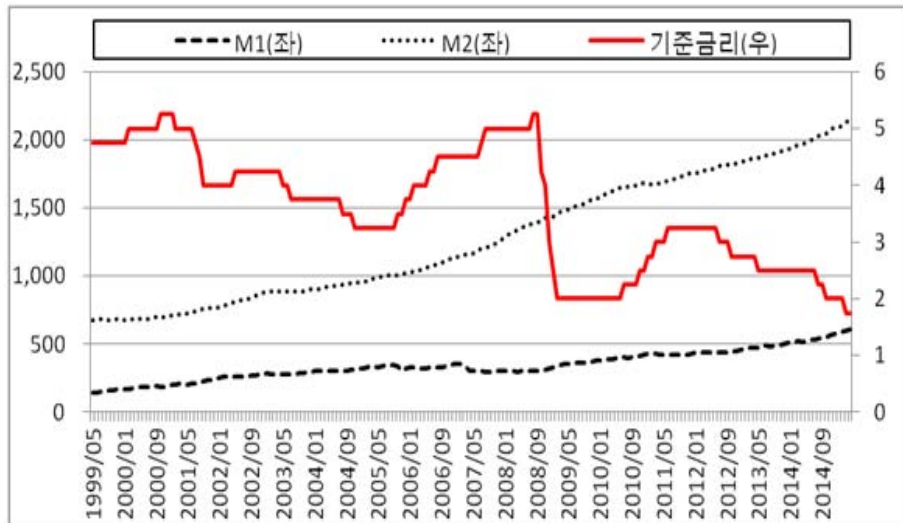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서는 3차례에 걸친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와 기준금리인하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섰고 유럽 또한 유럽중앙은행(ECB)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양적완화와 기준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우리나라도 2008년 10월, 2000년대 들어 최고 금리였던 5.25%의 기준금리를 4.25%로 1%p 전격 인하했다. 이후 2009년 2월까지 매월 금리를 인하하며 2.0%까지 급격히 인하했다.

이후 한동안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도 했으나, 경제성장 둔화와 그로 인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인해 2012년 6월부터 3.25%에서 2015년 6월 사상최저인 1.5%에 이르기까지 기준금리를 재차 인하하고 있으며, 그 여파로 시중의 유동성은 사상 유래 없는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표 19> 기준금리와 통화지표⁶⁴⁾ 추이

[단위: 조, %]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글로벌 저성장 기조로 인해 주식시장에서도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고 임대용 부동산 수익률도 하락⁶⁵⁾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투자대상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정기예금 등 수신금리도 지속 인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의 예금과 MMF, CMA 등 단기금융상품의 수탁고는 지속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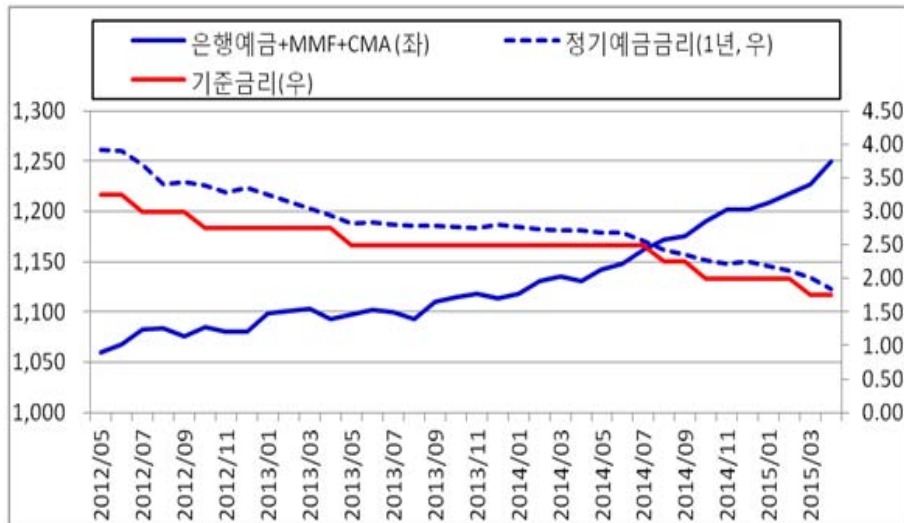
64) M1(협의 통화): 민간 보유 현금, 요구불예금, MMDA, MMF의 합계

M2(광의 통화): M1 + 정기예,적,부금, 시장형 금융상품, 실적배당형 금융상품 등의 합계.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여 결제성예금과 유동성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저축수단

65)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상반기말 기준 6.58%이던 오피스텔 임대수익률은 2015년 5월말 기준 5.75%로 하락. 단, 세금, 수선 등의 유지보수비와 공실에 의한 기회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은 수치로 실질수익률은 4%가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

<표 20> 금리와 은행 및 단기금융상품 수탁고 추이

[단위: 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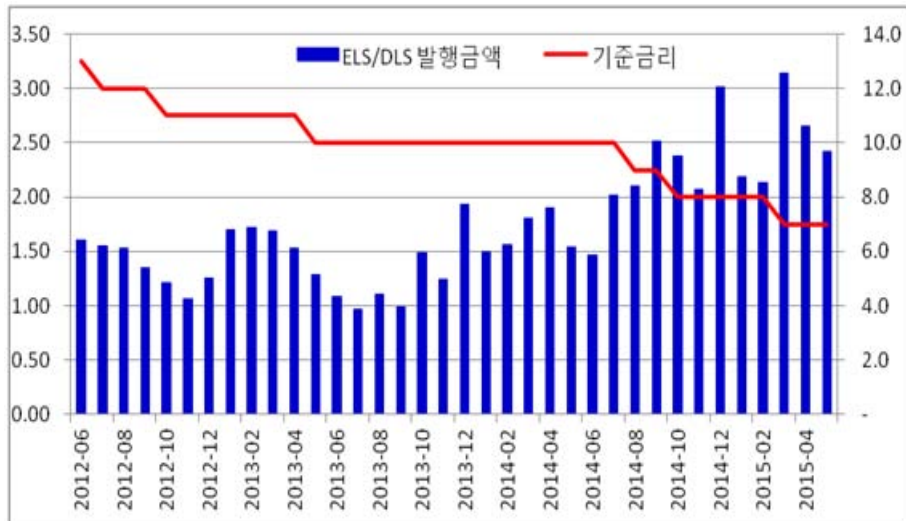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통계시스템

따라서, 위험대비 적정한 수익이 가능한 투자상품이 있을 경우 시중의 유동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추가연계증권(ELS, Equity Linked Securities)과 파생연계증권(DLS, 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등 파생결합증권이다.

매월 4~7조원 규모로 발행되던 파생결합증권은 기준금리가 인하되기 시작한 2014년 8월 이후에는 8~12조원으로 발행규모가 급증하여 2015년 6월 현재 발행잔액이 92.7조원에 달할 정도로 시중 유동자금을 흡수하였다. 이는 파생결합증권이 주식대비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정기예금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합리적인 투자대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표 21> 기준금리와 파생결합증권 월별발행현황

[단위: %, 조]



<표 22> 파생결합증권 발행현황

[단위: 조]

구분	공모		사모		합계
	원금보장	원금비보장	원금보장	원금비보장	
ELS	9.6	26.5	8.5	16.9	61.5
DLS	1.9	4.0	12.7	12.6	31.2

*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2015. 6.16 기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 지난해 국민연금의 투자대상별 수익률은 전통자산인 주식(0.36%), 채권(6.97%)에 비해 대체투자(12.5%)의 수익률이 더욱 높았다. 또한 캐나다 공적연금투자위원회(CPPIB)의 경우에도 2013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1년 동안 전통자산인 주식, 채권의 금액가중평균 수익률은 11.46%에 불과했으나, 대체투자 수익률은 26.46%로 대체투자가 압도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대체투자의 수익률이 전통투자 대상의 수익률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최근 수익률 제고의 목적으로 연기금 등 전문투자자들의 해외 및 대체투자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투자자들은 투자규모가 적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

따라서 집합투자기구를 조성해 일반투자자들에게도 대체자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면 민간의 유동성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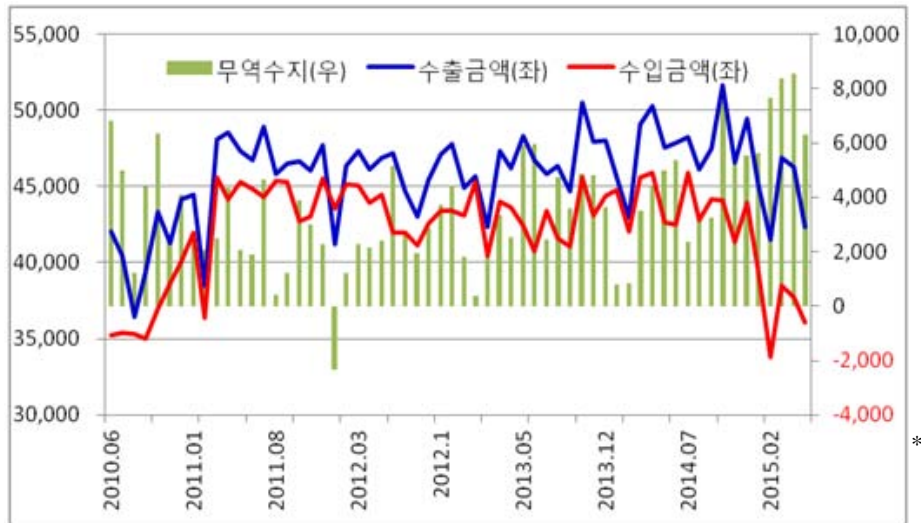
특히 시공 이후 운영 및 관리(O&M, Operation and Maintenance) 계약이나, 전력수급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과 같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가능한 발전사업 등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률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가 조성된다면, 시중의 유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5.2 자본수출 형태의 해외 진출 증가

2015년 6월 현재, 무역흑자가 40개월째 이어지고 흑자폭 또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반드시 좋은 일로만 보기는 어렵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한 상태에서 수출의 감소 대비 수입의 감소폭이 더 커서 흑자의 규모가 더 커지는 일종의 불황형 흑자와 같은 불안정한 상태의 흑자이기 때문이다.

<그림 23> 월별 무역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무역흑자를 반드시 좋은 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흑자로 인해 유입되는 달러는 원화의 가치를 상승(환율 하락)시켜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세계교역증가율의 감소, 글로벌 저성장 기조, 경쟁심화, 엔화 및 유로화 약세와 같은 경쟁국의 통화정책 등에 의해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환율마저 수출에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향후 우리 경제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무역흑자로 인해 유입되는 달러를 이용해 해외에 투자하는 자본수출(capital export)은 자본이득을 얻는 것 이외에도 환율 하락을 방어해 우리기업의 수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는 좋은 해결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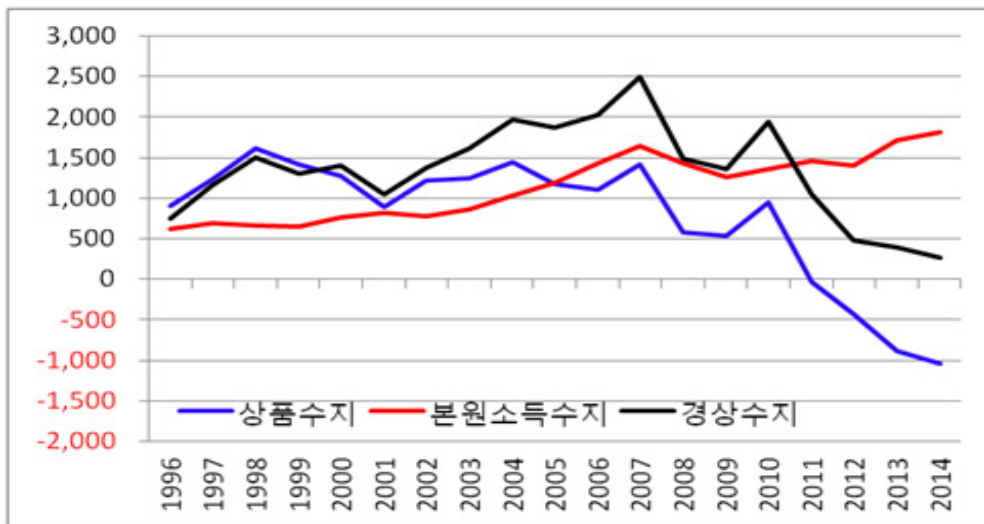
자본수출의 사전적 의미는 대외투자와 해외대부를 통해 외국에 자

본을 투자하여 이자와 배당 등을 통해 이득을 얻는 행위이다. 일반적으로 고자본축적국에서 자본부족국으로의 장기투자를 의미한다. 외국에서의 기업의 창설, 철도건설, 광산개발 등을 통해 이윤을 얻는 산업자본의 수출과 외국 정부채권의 매입, 차관공여, 은행 대부 등 이자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자본의 수출로 구분된다.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1991년 이후의 저성장 구간 동안 저성장에 대한 충격을 자본수출을 통해 완화해왔다. 1996년 이후 일본의 국제수지를 보면 감소하는 무역수지를 자본수출이 충당하여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24> 일본 상품수지와 본원소득수지 추이

[단위: 억 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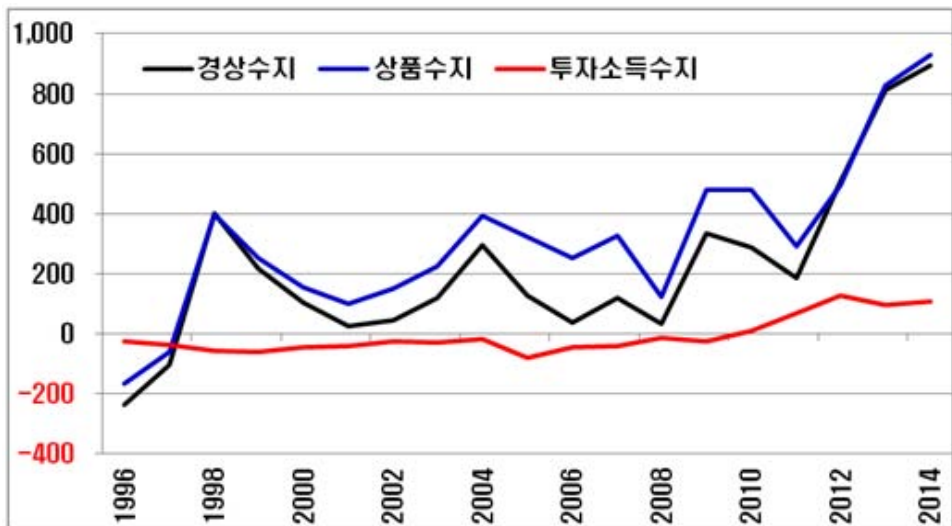
* 자료: 일본 재무성

반면, 우리나라의 2014년말 기준 대외투자 잔액은 2013년 대비 955억 달러 늘어난 7,166억 달러로 GDP의 약 50%에 달하는 규모의 대외투자를 하고 있으나⁶⁶⁾, 총 투자금액의 30% 이상을 현금, 예금,

66) 한국은행, 2014년 국제투자대조표(잠정)

대출금, 무역신용 등 수익성이 낮은 투자대상에 투자하고 있어 투자 소득이 낮아 아직 경상수지의 상품수지 의존도가 현저히 높다.

<그림 25> 우리나라 경상수지와 투자소득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앞서 설명한 자본수출의 2가지 형태 중, 외국에 자본을 투자해 이자나 배당소득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대부자본의 수출은 저성장과 저금리로 인해 주식과 채권 등 전통자산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대비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는 대부자본의 수출 보다는 인프라개발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산업자본의 수출 형태가 더욱 높은 수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설립을 통해 해외건설에의 투자를 활성화 시킨다면 산업자본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1.5.3 해외건설 진출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

정부의 일자리창출에 대한 노력으로 인해 고용지표가 지속적으로 호전되며, 2015년 5월말 기준 전체취업자수는 사상 처음으로 2천6백만명을 돌파하였다. 전체고용률도 60.9%를 기록하며 전년말 대비 1.5% 증가하였다.

하지만, 연령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고용률이 전년말 대비 5.4%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을 뿐, 15~29세의 고용률은 1.1% 증가하는데 그쳤다.

특히 30대의 고용률은 오히려 -0.2% 감소하였고, 40대와 50대의 고용률도 소폭 증가에 그쳐 고용지표의 호전은 순전히 고령층의 고용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아직 불안정한 상태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표 23> 전년말 대비 연령계층별 고용률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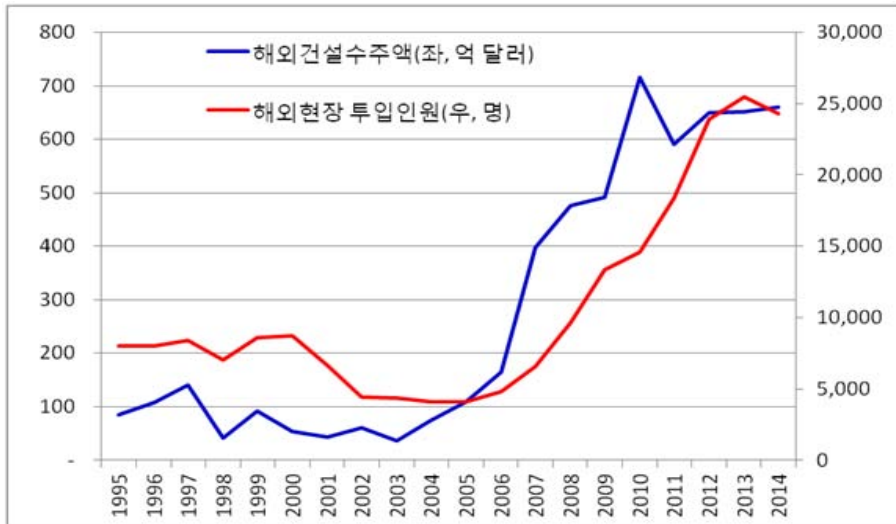
연령계층	2014년 말	2015년 5월	증감
15~29세	40.6	41.7	+1.1
30~39세	74.3	74.1	-0.2
40~49세	79.0	79.2	+0.2
50~59세	73.9	74.9	+1.0
60세 이상	35.7	41.1	+5.4
전체	59.4	60.9	+1.5

* 자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해외건설 진출 확대는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생산가능연령의 취업, 특히 30~50대의 취업률을 확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를 통해 해외건설의 금융조달이 보다 원활

해진다면 해외건설 수주액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곧 해외파견 건설 근로자에 대한 채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림 26> 해외건설 수주액 및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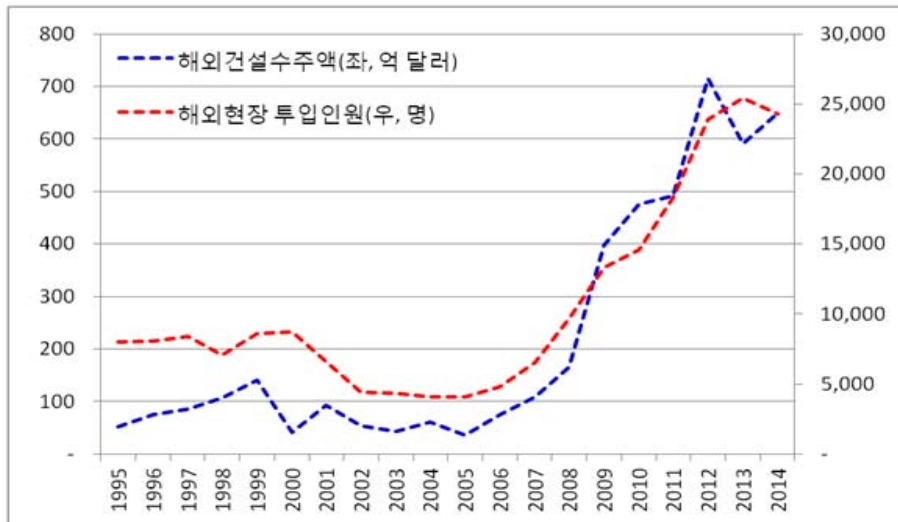
* 자료: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위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해외건설 수주액과 해외현장에 투입되는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수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 최근 20년 동안 해외건설 수주액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현장에 투입되는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의 수도 급상승했다.

같은 기간 해외건설수주액과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수의 상관계수는 0.853이라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최근 10년으로 기간을 축소하더라도 0.847의 강한 상관관계가 유지되었다.

해외건설 수주액을 2년 래깅해서 해외파견 건설근로자와의 상관계수를 비교해보면 상관관계는 더욱 강해진다. 최근 20년의 해외건설 수주액과 해외현장 근로자수의 상관계수는 0.961이며, 최근 10년간의 상관계수는 0.967로 완전정상관(perfect positive linear correlation)과 유사할 정도로 높게 나타난다.

<그림 27> 해외건설 수주액 및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추이 (2년 래깅)



* 자료: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04년 4,104명에 불과하던 해외파견 건설근로자는 2013년 기준 25,441명으로 21,340명 증가하며, 6.2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 산업의 취업자 수가 1.1배 증가⁶⁷⁾한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건설수주액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건설 주요 기업들이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수주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간 1,000억 달러의 수주가 달성된다면 취업자 수는 39,000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⁶⁸⁾

67) 김길주, 해외건설 일자리 창출 추이 분석과 전망,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2014

68) 김길주, 해외건설 일자리 창출 추이 분석과 전망,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2014

제2장 해외건설특화펀드 활성화를 위한 실행 방안

2.1 해외건설 금융투자의 특성과 특수목적펀드의 성공요인과 비교분석

해외건설과 관련한 금융투자의 특성은 다른 투자처에 비하여 투자금 회수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라는 점인데, 이는 기초사업인 건설작업이 종료되어야만 투자금의 회수를 위한 재원이 마련된다는 점에 기인한다. 해외건설에 대한 금융투자 이러한 특성을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게 되고, 이로 인해 초기 투자자금의 유치가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려면, 수익창출의 안정성을 확보하거나 고수익이 보장되도록 하여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거나, 투자자금 외의 재원으로 초기 운용자금 마련이 가능하도록 차입 등을 허용하여 마련한 재원으로 우선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추후 수익 실현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본격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안정적인 고수익창출을 보장하기는 어렵고, 개정해외건설촉진법에서 일정범위 내의 차입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차입만으로 필요한 투자자금을 모두 확보할 수는 없는 문제가 있다.

결국, 다른 해결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본 특수목적펀드의 성공사례를 해외건설금융투자의 위와 같은 문제점과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성공사례로 살펴본 해외자원개발펀드의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자원개발 제반설비를 해외에 설치하는 것을 기초사업으로 하므로 해외건설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더욱이 초기투자자금의 투입 후 투자회수까지 장기간의 기간이 소요된

다는 점도 유사하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국내의 에너지고갈이라는 중요한 이슈와 맞물려 그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폭넓은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고 이 점이 해외자원개발펀드의 성공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반면에, 해외건설은 그 중요성을 비교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즉, 정부는 해외건설에도 해외자원개발 이상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국내 건설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해외건설시장으로의 전향할 필요가 있고, 해외 플랜트시장의 시장성은 상승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건설기업들이 중동 정유공장, 인도 LNG인수터미널 등을 수주하는 등 건설기술의 높은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점 등을 인식하고, 이와 같이 기존에 형성된 유·무형의 국내 건설자원들이 국내에 머물지 않고 해외건설시장으로 부드럽게 전향할 수 있도록 해외건설펀드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한편, 또 다른 성공사례로 앞서 살펴보았던 농식품투자조합의 경우 민관합작펀드를 조성하여 확보가능한 자금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에 대한 간접펀드설정 시 그 자금운용대상을 농식품산업의 개발, 안정이라는 펀드설정의 특수목적과 결부시켜 이와 관련 있는 일정한 상품으로 제한함으로써 간접펀드설정을 통해 유치한 자금이 실질적으로도 특수목적펀드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건설펀드도 위와 같은 성공사례와 마찬가지로 민관공동펀드인 글로벌인프라펀드를 조성하여 연기금, 기타투자자 및 정부가 출자한 산하공공기관으로부터 양방향의 출자를 받고 있는데, 인프라펀드의 자펀드를 특수목적에 부합하는 펀드형태로 설립하려는 노력이 본격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접펀드를

통해 유치된 자금이 실질적으로 특수목적펀드의 발전에 기여하려면, 농림수산물식품모태펀드가 창업아이디어펀드에 출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존 특수목적펀드의 특수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설되는 자펀드의 목적성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해외 현지에 적합한 인프라 개발 능력고양을 위한 해외인프라관련 펀드나, 국내건설인력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건설인력지원펀드 등을 해외건설 인프라펀드에 대한 자펀드로 구성하고 해외건설인프라펀드 또는 이에 대한 간접펀드가 위 자펀드에 출자하는 것이다.

2.2 모자형펀드⁶⁹⁾ 구조 활용

2.2.1 공모 해외건설특화펀드 자금모집의 바람직한 방식

해외건설특화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가 활성화 되어야 하지만, 현시점에서 일반투자자들의 자금만으로 적정한 운용규모⁷⁰⁾를 모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해외건설과 같은 대체투자(Alternative Investment)자산은 투자대상 및 수익구조가 비정형화 되어있기 때문에 주식, 채권 등 전통투자대상에 비해 투자대상에 대한 이해가 어려우며, 리스크가 높다는 일반적인 인식으로 인해 위험선호도(risk preference)가 낮은 일반투자자의

69)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으는 펀드(자펀드)와 모집된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모펀드)로 구분. 자펀드를 통해 모은 자금을 모펀드에 투자하는 구조. 모펀드는 여러개의 자펀드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자펀드는 다양한 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어 자산배분에 효율적임

70) 해외건설특화펀드의 적정한 운용규모에 대해 해외부동산·인프라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13명의 운용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3천억 이상 5천억 미만’ 이라고 응답한 운용역이 가장 많았으며(54%), ‘5천억 이상 1조원 미만’ 으로 대답한 운용역이 그 뒤를 이었다.(31%)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투자대상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공모펀드 방식의 해외건설특화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2.2.2 해외건설특화펀드의 리스크 감소 방안

해외건설특화펀드의 리스크를 감소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기관투자자와의 공동투자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상품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성을 갖춘 기관투자자와의 공동투자는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투자대상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자금력을 갖춘 기관투자자 등 전문투자자의 자금을 기반으로 공모펀드를 설정하고 일반투자자들을 투자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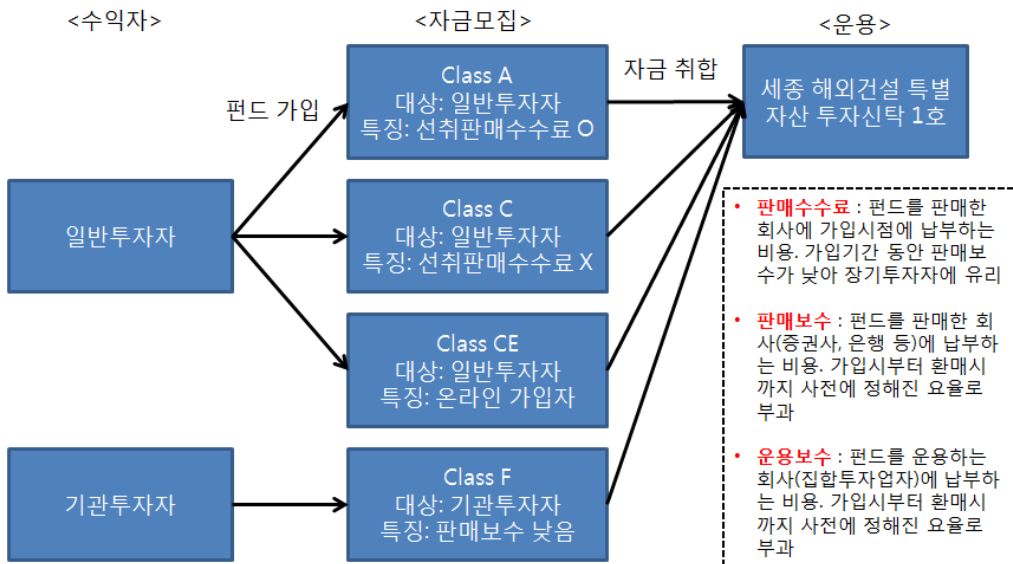
<표 24> 투자자 유형

구분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의미	투자활동을 주된 업으로 하는 금융기관 등 금융상품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자금력을 갖춘 투자자	기관투자자와 금융상품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자금력을 갖춰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일부 개인투자자	전문투자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위험감수능력이 낮은 개인투자자

전문지식	매우 높음	매우 높음	일반적으로 낮음
자금력	매우 높음	높음	낮음

다만 아쉬운 점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자금을 하나의 펀드로 모으기 위해서는 종류형 펀드⁷¹⁾(multi class fund) 방식이 일반적이
나, 종류형 펀드는 투자자간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가 다르다는 점
외에는 차이점이 없고, 오히려 전문투자자들의 판매보수가 더 낮기
때문에 종류형 펀드만을 가지고는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리
스크 감소 방법으로 볼 수 없다.

<그림 28> 종류형 펀드 구조



71) 하나의 펀드에 수수료 징구 방식, 가입방식, 투자금액이 다른 투자자들로 구성된 펀드, 클래스별로 다른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를 적용함

따라서 일반투자자들의 낮은 위험선호도를 보상해줄만한 실질적인 리스크 감소 방안이 필요한데, 그 해법으로 분산투자를 통해 해외건설특화펀드의 리스크를 낮추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해리 마코위츠⁷²⁾의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MPT, Modern Portfolio Theory)에 따르면 분산투자한 포트폴리오는 한 가지 자산에만 투자한 포트폴리오에 비해 위험이 감소하기 때문에 해외건설특화펀드와 다른펀드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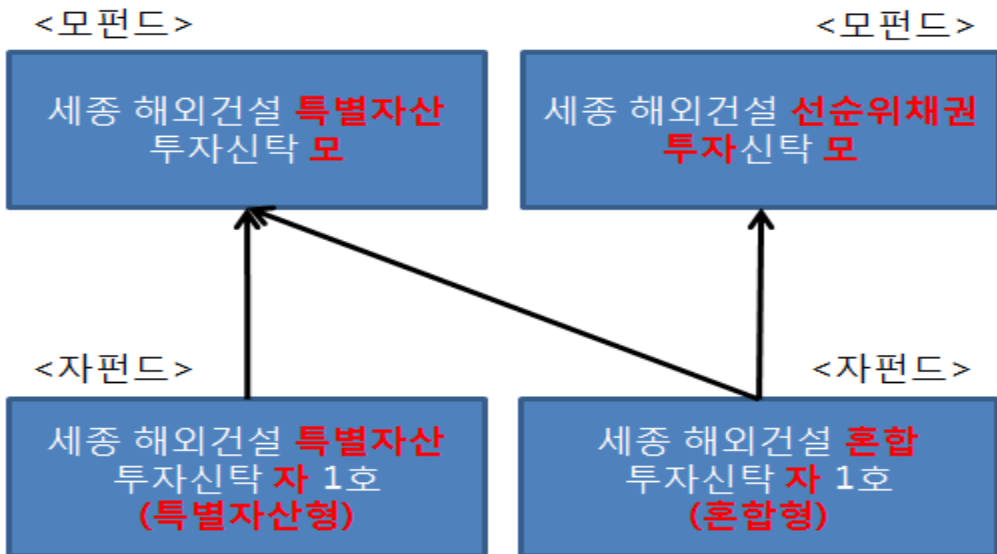
기존 해외건설 및 인프라에 투자하는 펀드는 구조적으로 자산의 분산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채권에도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분산투자가 가능해졌다.

구체적인 방법은 모자펀드 형태를 활용하여 자산배분이 가능하도록 혼합형 펀드를 만드는 것이다.

기관투자자 등 전문투자자들은 ‘특별자산 모투자신탁’에 100% 투자하고 일반투자자들은 ‘특별자산 모투자신탁’과 ‘선순위채권 모투자신탁’에 50%씩 분산투자해 리스크를 낮추는 방식이다.

72) Harry Max Markowitz,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경제학자. 현대 투자이론의 기본을 이루는 분산투자의 효율성에 대해 이론적으로 증명

<그림 29> 모자형 혼합형 펀드 구조



해외건설의 높은 수익성과 선순위채권의 안정성을 결합한 일반투자자용 해외건설 혼합형 펀드는 해외건설특화펀드에 100% 투자하는 것에 비해 실질적인 리스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2.3 전문집합투자업자 설립 지원

2.3.1 전문집합투자업자 신설 필요성

이번 해촉법 개정의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특화펀드를 설정하고 일반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관투자자와 공동투자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심리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분산투자를 통해

실질적인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해외건설특화펀드를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주체를 찾기가 쉽지 않다.

그 첫 번째 이유는 국내에 해외건설관련 펀드를 전략상품으로 운용하고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해외건설관련 펀드를 운용중인 일반집합투자업의 경우 상품의 포트폴리오 다각화(portfolio diversification)의 차원으로만 운용하고 있을 뿐, 회사의 전략상품으로 운용하는 회사는 없다.

따라서 전체 운용자산이나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전사적 차원에서 노력을 경주하기 어렵다.

<표 25> 일반집합투자업자와 전문집합투자업자의 비교

구분	일반집합투자업자	전문집합투자업자
요건	최소자본금 40억 전문인력 5명	최소자본금 10억 ⁷³⁾ 전문인력 3명
업무가능 영역	모든 자산군에 대한 집합투자업 영위 가능	특정 자산군에 대해서만 집합투자업 영위 가능
비고	해외건설 관련 펀드는 일부 운용사에서만 사업다각화 목적으로 운용 중	기존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업자는 사모전문집합투자업자로 전환 유도

또한 대체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기존 자본시장법상의 특별자산 전문집합투자업자의 경우에도 해외건설에 특화된 자산운용사는 찾을

73)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전문집합투자업자의 최소자본금. 자본시장법상 전문집합투자업자의 최소자본금은 20억원

수 없었다.

<표 26> 특별자산 전문집합투자업자 현황

회사명	설립일	자본금 (백만원)	운용규모 (십억원)	인원 (전문인력)	주투자대상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	2006. 5	4,000	972	18(7)	국내 인프라
KDB인프라자산운용	2003.10	10,000	4,700	39	국내외 인프라
RC에너지자원자산운용	2008. 7	8,500	450	18(10)	국내외 에너지, 사모전문집합투 자업자 전환 중
삼천리자산운용	2008.12	8,000	1,174	20(7)	국내외 에너지, 인프라
아이디어넷자산운용	2011.10	4,000	270	15	국내 특별자산 (지식재산권 등)
첼시자산운용	2010. 5	4,100	60	10(3)	국내 특별자산 (대출채권)
골든키자산운용	2011. 6	3,900	35	13(6)	국내 특별자산 (ABS 등)

* 2015.6.30. 현재(회사별로 기준일의 차이 있음) 금융투자협회 공시자료 및 각사 담당자

두 번째 이유는 해외건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등 경쟁력을 갖춘 회사가 없기 때문이다. 해외건설은 프로젝트별로 사업구조 및 수익 구조가 다르고, 프로젝트의 기간이 장기인 만큼 불확실성이 높아 현금흐름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지역에 따라 법과 규제, 과세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일 분야의 전문가 집단보다는 재무분석, 법률, 회계 등 여러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해외투자개발사업이 활발해진 역사가 그리 길지 않고⁷⁴⁾, 사업성평가 또한 기술적인 부분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건설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2.3.2 전문집합투자업자 지원 필요성 및 지원 방안

가. 해외건설 전문집합투자업자 설립에 대한 지원 필요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영업 중인 기존 집합투자업자를 활용하여 해외건설특화펀드를 설정하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새로운 주체가 해외건설에 특화된 전문집합투자업자를 신설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은 설정된 펀드의 순자산가치에 사전에 정해진 운용보수율을 곱해서 산정되는 운용보수가 전부이기 때문에⁷⁵⁾ 설립 준비 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또한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정 필수인력, 사무실, 전산 등에 대한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고정비용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설립준비기간부터 소요비용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의 펀드가 조성되기까지 수익은 발생하지 않고 비용만 발생하는 수익구조로 인해 많게는 수년 동안 적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주체를 찾기 쉽지 않다.

74) 해외건설협회의 종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BOO, BOT 등 개발형 사업이 시작된 것은 1994년(동아건설의 라오스 SEIPAN SENAMNOY 수력발전소공사)이지만, 연간 5건 이상의 사업이 진행된 것은 2011년부터임

75) 일부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부수업무 등록을 통해 금융주관을 하거나, 자기자본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집합투자업자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해외건설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중요성과 건설업의 활로는 오직 해외뿐이라는 현재의 상황, 해외건설촉진법 개정의 정책적 효과성 등 공익성을 감안할 때 신규로 설립되는 전문집합투자업자의 초기운영수익을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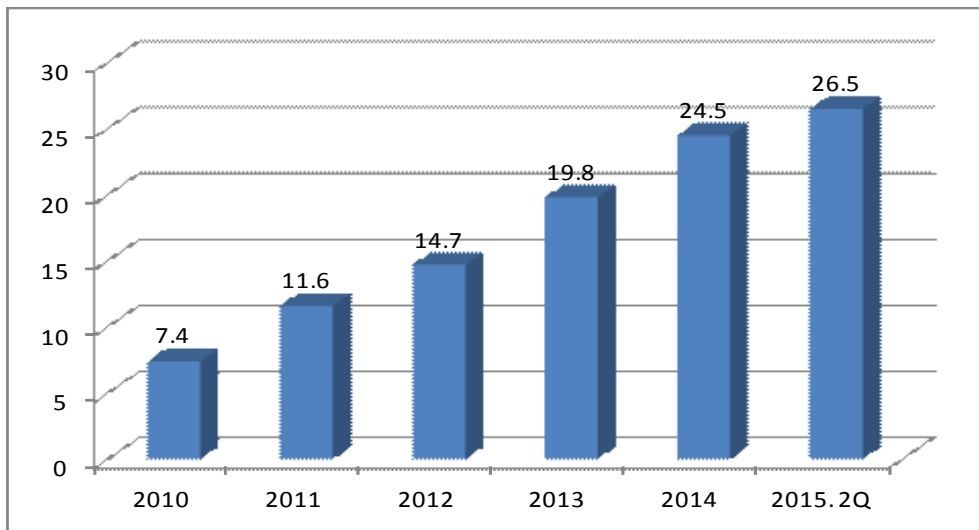
나. 해외건설 전문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초기 지원 방안

글로벌 경제 성장률의 하락으로 인해 전통자산의 수익률이 하락함에 따라 국내 연기금의 관심이 해외투자, 대체투자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현재 약 500조원인 운용자산 중 5.3%인 26.5조원을 해외대체자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 싱가포르 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해외투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림 30> 국민연금의 연도별 해외대체투자금액 현황

[단위 : 조원]



* 국민연금 2015년 기금운용 세부내역

국민연금이 해외부동산과 인프라 부문에서 위탁운용하고 있는 59개의 운용사는 모두 해외운용사인데 이는 국내운용사 중에서는 적절한 위탁운용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27> 국민연금의 해외 부동산/인프라 위탁운용사 현황

운용사명
Actis, Alinda, ArcLight, AXA PE, Beacon, BlackRock, Blackstone, Brookfield, Carlyle, Cerberus, CITIC Capital, Clarion Partners, CLSA Capital Partners, Colony Capital, Cornerstone, CP2, Deutsche Asset & Wealth Management, EIF, EIG, EQT, First Reserve, GAW Capital, GE Capital, GIP, GLP, Grosvenor, Harrison Street, Hawkeye, Heitman, Hillwood, Hines, IFC AMC, Invesco, J.P. Morgan, KKR, LaSalle, Lend Lease, Lexington, Macquarie, Meridiam, Meyer Bergman, Morgan Stanley, Novion, P2, PAG, Pantheon, Pramerica, Riverstone, Rockpoint, Rockspring, Russell Investments, Silverpeak, Starwood, TIAA-Henderson, TIAA-CREF, Tishman Speyer, Torchlight, Townsend, Westbourne

* 국민연금 2015년 2분기말 거래기관 현황

하지만 해외운용사에 위탁한 자금을 우리해외건설기업과 수주경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국가 기업의 자본조달 수단으로 활용된다면 금융경쟁력 부족으로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해외건설업자들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의 풍요롭고 안락한 노후를 위해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수익을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6,470억원의 국고보조금이 들어갔고 내년에도 10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을 예정인 국민연금에서 우리 해외건설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이는 국민연금운용지침 제4조(기금운용 원칙) 중 공공성의 원칙⁷⁶⁾에 위배되는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신설되는 운용사에 최고수준의 전문인력을 영입하고 국토교통부의 투자개발사업을 활발하게 발굴하고 있는 글로벌인프라펀드와 협업관계 구축을 통해 리서치 능력을 보완해 해외운용사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다면 굳이 해외운용사에만 위탁 할 필요가 없으며, 국민연금이 해외투자 위탁업체에 수수료를 퍼준다는 일각의 오해⁷⁷⁾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국민연금의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나온 총적립금의 증가비율을 감안하면 국민연금의 2016년 해외대체투자금액은 약 29조원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중 2%인 5,800억원만 신설 운용사에 집행한다면 국민연금의 입장에서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다각화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신설되는 운용사도 초기 운영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밖에도 해외대체투자 중 부동산과 인프라 등 해외건설분야에 관심은 있으나, 경험부족 및 리스크관리에 대한 부담으로 실제 투자에 주저하는 연기금들에 대해 연기금 투자풀을 구성하여 신설 운용사에 위탁한다면 자금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투자수익률도 높이고, 해외건설업체들에게 든든한 금융파트너로서 고부가가치 해외건설 수주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

76)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고, 기금 적립규모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국가경제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77) MBC·연합뉴스·연합인포맥스 등에서는 2015년 10월 4~5일 “국민연금, 해외투자 위탁업체에 수수료 퍼주기 ‘논란’ ”이라는 보도한 바 있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는 ‘해외투자는 시장 및 경제적 여건 등 제반환경이 국내와 다른만큼 수수료 수준도 차이가 발생하며, 해당 시장 내 통용되는 일반적인 수준’ 이라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해명하였음

2.4 정책금융기관의 금융 지원

2.4.1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

수출입은행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신고수리를 받은 사업을 대상으로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당사자의 사업상 탐사·개발·생산 전 과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 중 국내기업의 경우 위 소요자금은 주로 현지법인 출자 및 대부투자 자금, 비법인 형태의 해외 사업자금을 의미하고, 국외기업의 경우 현지법인의 운영 및 시설자금, 합작파트너의 출자자금, off-take 계약상 현지기업의 개발자금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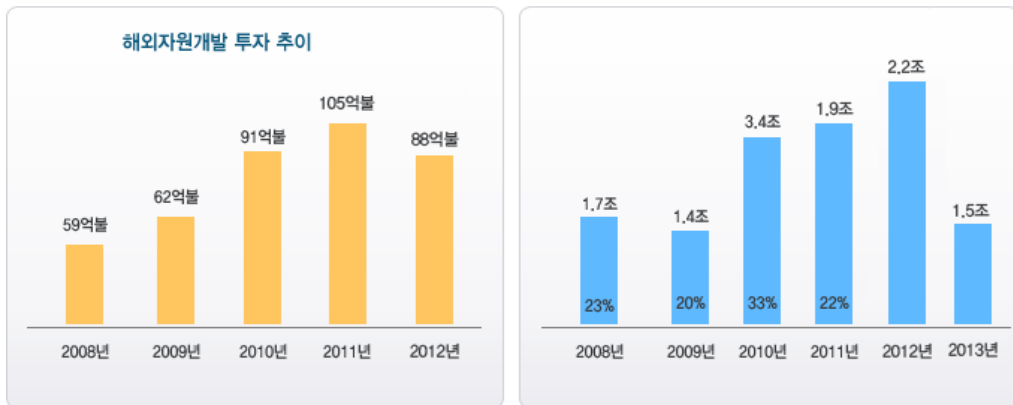
수출입은행은 현재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대상이 되면 대출의 경우 일반 해외투자자금에 비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주고, 대출한도도 소요자금 100%까지 모두 지원해주고 있다.

<그림 31>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구조도(해외자원개발협회)



수출입은행의 지원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는 해외투자관련 대출, 수출자금 대출, (대외)채무보증, 이행성 보증, 프로젝트파이낸스 관련 대출, 보증, 매장량 기초금융(RBF)이 있고, 정부의 자원개발 활성화 시책 및 자원개발기업의 투자수요 증대에 맞추어 자원개발금융의 지원규모 또한 대폭 확대하고, 특히 신규유망분야인 희유금속 개발사업, 해외농업개발사업,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32> 자원개발사업 지원추이 (해외자원개발협회)



해외자원개발, 해외농업사업 등과 해외건설은 매우 유사한 사업으로서 해외건설에도 위와 같은 지원을 활성화 하는 경우 해외건설사업 또한 민간금융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유하고 있는 건설자원을 효율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4.2 산업은행의 금융 지원

미래해외자원 확보를 위해 산업은행도 자원개발 사업에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자원개발 사업은 거액의 투자비용, 높은 리스크, 장기적인 투자비용회수 등의 특성으로 인해 민간금융의 적극

적인 참여가 곤란하다는 특성을 이해하고 수출입은행의 금융 지원과 마찬가지로 민간금융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산업은행이 실시하고 있는 지원이다.

금융지원방식으로는 프로젝트파이낸스(PF), 대출 및 보증, PEF(Private Equity Fund)가 있는데 (i) PF의 경우 국내외 오일 및 가스 등 광물자원 개발사업과 이와 관련된 인프라 및 해양플랜트 건설·운영 사업을 대상으로 PF방식의 금융자문을 주선하고 대출을 실행하고 있고 (ii) 대출 및 보증의 경우 국내기업 및 해외법인이 추진하는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소요자금을 기업 앞으로 직접 대출해주고 있으며 (iii) PEF의 경우 사모펀드 형태의 출자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림 33> 산업은행의 금융지원 조직 (해외자원개발협회)



위와 같은 지원은 해외건설의 경우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금융 지원으로 보이고, 관련 법령 및 해외건설의 성질상 별다른 제한이 없고, 해외건설도 해외자원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초기 투자자금의 모집이 어려워 민간금융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금융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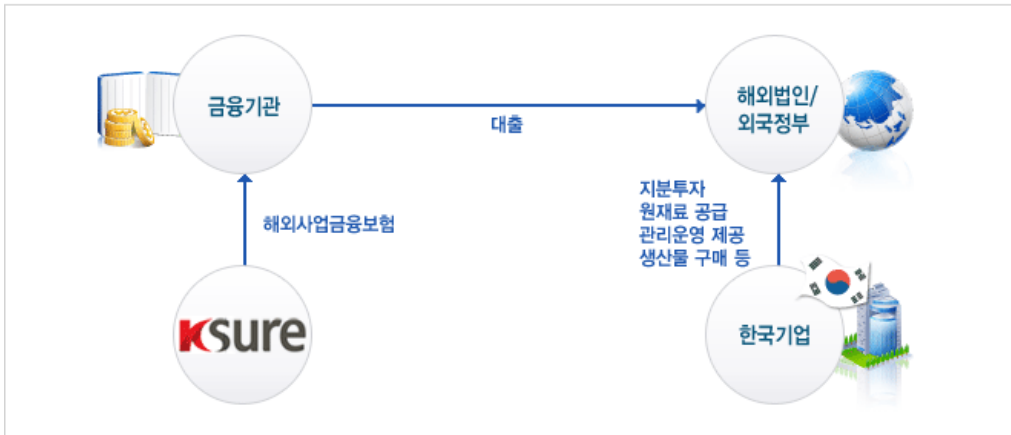
2.4.3 무역보험공사의 금융 지원

우리나라의 무역은 과거 국내 생산물을 해외로 수출하던 형태에서 최근 해외 현지에서 생산하여 현지 및 제3국에 판매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OECD 공적지원수출신용협약이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OECD 가이드라인 등에 의해 금융지원 조건에 대한 제한이 해소되어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탄력적이고 다양한 금융구조를 설계하고 이를 통해 금융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역보험 또한 다양한 금융지원 형태 중 하나로서 해외사업금융보험, 해외투자보험의 상품을 지원하고 있다. (i) ‘해외사업금융보험’이란 국내외 금융기관이 한국 기업이 지분투자, 원재료 공급, 관리운영 제공, 생산물 구매 등을 제공하는 외국인(정부, 공공단체 및 외국법인 등)에게 수출증진이나 외화가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상환기간 2년 초과로 조건으로 대출한 후 대출원리금을 상환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의미하고, (ii) ‘해외투자보험(PRI)’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투자를 한 후 투자대상국에서의 수용, 전쟁, 송금위험 등으로 인하여 그 해외투자의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채무이행 등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말하며 (iii)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이란 국내기업에 대하여 해외자원개발, 해외 M&A 등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⁷⁸⁾으로 인한 금융기관의 대출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해주는 것을

78) 비상위험은 OECD가이드라인 상의 국가신용위험(모라토리움 선언, 송금지연조치, 채무의 감면, 결제기일의 연장 등)을, 신용위험은 금융계약 상대방의 파산, 지급지체 등을 각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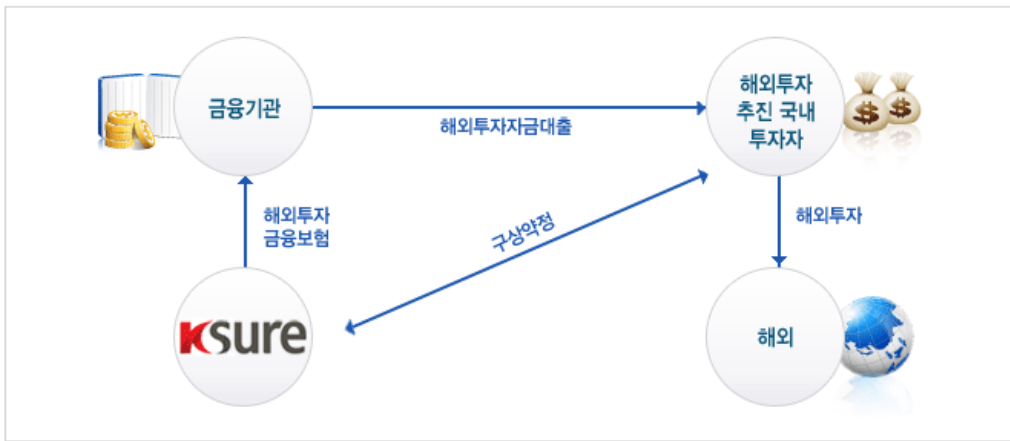
<그림 34> 해외사업금융보험의 구조 (해외자원개발협회)



<그림 35> 해외투자보험(PRI)의 구조 (해외자원개발협회)



<그림 36> 해외투자보험(투자금융)의 구조 (해외자원개발협회)



해외건설의 경우도 해외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는 점, 초기투자자금을 건설 재원에 투입해야 하는 관계로 운용하기가 어려운 민간금융상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다른 해외투자과 마찬가지로 위 무역보험 지원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 해외건설투자 전문가 육성을 위한 제도 마련

해외건설은 프로젝트별로 사업구조 및 수익구조가 다르고, 프로젝트의 기간이 장기인 만큼 불확실성이 높아 현금흐름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특징이 있으므로, 해외건설 전문투자업자가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집합투자업자와 차별화 되기 위하여서는, 해외건설사업 분야에 대한 투자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운용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수 이상의 해외건설업 전문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할 것을 해외건설 전문투자업자로서 인가를 받기 위한 인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그러한 전문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건설 또는 엔지니어링활동 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보유하여 해외건설사업의 특성을 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을 해외건설특화펀드의 운용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운용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및 교육과정을 충실히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2.6 주무관청과의 펀드설립 협의 절차 개선

해촉법 제19조의2는 금융위원회는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또는 보고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나 동 법이나 해촉법 시행령에는 그와 같은 협의가 어떠한 내용이며 그 구체적인 절차가 어떠한지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서로 다른 정부부처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미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기는 하나, 향후 위와 같은 펀드설립 협의 절차 운영 시에 위 규정이 명목규정으로 전락하여 실질적으로 금융위원회가 단독으로 등록 또는 보고 절차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결과를 방지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도 살펴볼 바와 같이, 해촉법이 해외건설특화펀드의 편이를 증진시키고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통상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해 심사하는 기준보다 해외건설특화펀드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의절차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등록 또는 보고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도 전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 개진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2.7 금융기관의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방법 개선

2.7.1 은행의 국내 SOC 투자 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특례

1995년 이래 현재까지 은행법의 규율을 받는 은행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1항).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보유자산 각각의 상환불능 위험도에 따른 위험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보유자산의 신용리스크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은행이 투자를 결정할 때 해당 투자의 수익률뿐만 아니라 해당 자산의 위험가중치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하는 표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두어 구체적인 자산의 위험가중치와 계산식 등을 규정하는 한편, 국내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은행의 투자를 독려하고자 은행이 국내 민간투자사업에 투자할 때 적용하는 신용위험가중비율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즉, 은행이 국내 SOC, 특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임대형민자사업(BTL)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에 대한

출자 형식으로 투자할 경우 그 지분출자금액의 위험가중자산 계산 시 표준방법에 의한 위험가중치 적용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위와 같은 특수목적법인의 주식이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의 경우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인 400%가 아닌 15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은행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방법으로 은행이 국내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이다.

2.7.2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은행이 글로벌인프라펀드를 활용하여 해외 인프라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일종의 간접투자로서 Capital Call 방식의 집합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어 은행이 펀드에 대한 투자자가 되는 방식이다.

현행 규정은 이러한 경우 펀드 약정시점에서는 일종의 지분투자로 간주하여 약정금액의 75%에 대하여 주식 익스포저의 내부등급법 위험가중치 400%를 적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개별 투자안 발굴 후 실제 투자실행(설정) 단계에서는 약정잔액(약정금액에서 실제로 투자에 투입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의 75%에 대하여 역시 주식 익스포저의 내부등급법 위험가중치 400%를 적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고, 실제 투자된 투자 금액(수익증권장부가액)에는 기초자산의 위험가중치의 합계를 위험가중치로 보고 이를 적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한다.

만일 기초자산의 위험가중치의 합계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약정잔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 익스포저의 내부등급법 위험가중치

400%를 적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인프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은행의 국내 인프라 사업에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으로 국내 인프라 사업 투자분에 대하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적용되는 위험자산가중치를 경감하여 준 선례를 해외로 진출하는 해외 인프라 사업에 있어서도 적용하여 줄 필요가 있다.

해외 인프라 건설에 진출하는 국내 건설사가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금융지원을 통하여 국내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은행의 해외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인프라펀드의 투자 단계 중 개별 투자안 발굴 전인 약정금액에 대하여 주식 익스포저의 내부등급법 위험가중치 400%를 적용하는 것은 개별 투자안 발굴 전부터 지나치게 은행의 투자를 움츠러들게 만들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국내 인프라 개발 사업 투자에 관한 특례의 경우와 같이 주식 익스포저의 표준방법 위험가중치인 1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개별 투자안 발굴 후 약정잔액에 대하여는 순수한 지분투자 성격이 있어 이에 대하여 주식 익스포저의 내부등급법 위험가중치 400%를 적용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 투자되어 회전되고 있어 장래 수익이 실현될 투자금액에 대하여는 역시 주식 익스포저의 표준방법 위험가중치인 150%의 위험가중치를 적용하여 신용위험가중자산을 산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주식 익스포저의 내부등급법 위험가중치 400%를 적용하게 되면 실제 사업 개발에 투자되지 않은 약정잔액과 동일한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게 되어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은행의 글로벌인프라펀드에의 투자 결정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유인이 되기 때문이다.

2.8 조세특례 부여

해외건설업에 대한 투자는 환위험등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고 투자회수기간이 장기라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투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자가 해외건설업에 장기간 지분투자 등을 하기 어려우므로, 해외건설업에 투자하는 민간투자자에게 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세정책적 측면에서의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세법은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조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에 해외건설업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세특례 규정이 없다.

따라서 해외건설업의 필요성 및 그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이 해외건설업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8.1 개인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

해외건설특화펀드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 해외건설특화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해외건설촉진법 제19조에 따른 해외건설투자회사의 주식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이하 해외건설투자회사와 합하여 “해외건설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해외건설투자회사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해외건설투자회사등별로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 또는 수익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로 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해외건설특화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외건설특화펀드별로 보유주식등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보유주식 등에 대한 배당소득은 소정의 기간 동안 과세가 면제되거나 5.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가 종료되고, 3억원의 금액을 초과하는 보유주식등에 대한 배당소득은 일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인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과세가 종료된다.

반면에 개인투자자의 일반 배당소득은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후 개인투자자의 기타 금융소득금액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6) 등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가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소정의 투자금액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5(지방소득세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5)로 과세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즉, 분리 과세한다).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투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사업의 투자위험이 크고 투자자본의 회수기간이 장기인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와 같은 조세특례를 규정하여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이 해외건설투자회사등에 유입되는 것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2.8.2 법인투자자에 대한 조세특례

해외건설업에 대한 투자의 경우 일반적인 해외투자보다 환위험 등 투자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투자회수기간이 장기간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국가는 외국인투자 법인 자체의 영업활동소득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결산 후의 이익분배금에 대하여도 조세면제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해외건설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해외건설업 시행국가에서 조세를 면제받은 배당소득은 국내에서도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 아래와 같이 해외건설업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투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건설업 시행국가에서 그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면제한다.

참고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일반적인 해외투자보다 그 원본의 회수가능성이 낮은 것은 물론 자본의 회수기간이 장기인 경우가 일반적으로 자원보유국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배당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자원 확보 및 국내에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해외에 자원개발투자를 하는 경우 상대국에서 조세를 면제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따라서 해외건설업 역시 우리나라의 신성장 경제동력으로 고용창

출 등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개발도상국 등과의 경제협력강화로 국익창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법인투자자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당 해외건설업 시행 국가에서 면제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국내에서도 과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제3장 해촉법의 하위 규정 정비

3.1 해촉법 관련 훈령, 매뉴얼, 지침 등 정비

3.1.1 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해촉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문집합투자업자는 해촉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2명 이상의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위 요건 중에는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건설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가 포함된다(해촉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

이와 관련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6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개발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수료”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나 금융기관 종사경력자 등을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상 투자운용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규정의 경우 해외자원개발과 전혀 무관한 경력을 보유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육의 초점이 자산운용보다는 자원개발의 측면에 맞춰져 있다(‘해외자원개발 투자운용인력의 교육에 관한 규정’ 참조).

그러나 해촉법 시행령은 명시적으로 자산운용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해당 교육을 받게 될 대상자들은 대체로 건설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정 경력을 쌓은 자들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은 자산운용에 대한 내용이

주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안을 마련하였는바 그 자세한 내용은 3.4 해외건설특화펀드 운용역 교육 과정 검토에서 살펴본다.

3.2 해외건설특화펀드 승인 절차 검토

3.2.1 해외건설특화펀드의 설정

2015. 8. 11. 개정 해촉법이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민간자금조달 수단으로 펀드 형태(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를 도입, 활용하고자 한 취지는 펀드 형태가 다른 자금조달방법에 비하여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는 데 용이하고, 특히 투자대상사업 및 투자자의 특성에 따라 펀드구조를 신축적으로 설계함으로써 수익과 위험에 관하여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어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 규모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해촉법은 해외건설특화펀드로서 동 법 제19조의6에 따른 방법으로 해외공사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 수익자 또는 사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해외건설투자회사, 해외건설투자신탁 또는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설립 또는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참조).

해외건설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이고, 해외건설투자신탁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이며,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기본적으로

로 그 설립 또는 설정과 관련하여서는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해촉법과 유사하게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서도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펀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해외자원개발펀드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해외자원개발사업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하고(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 제1항), 해외자원개발펀드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와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두 가지 형태가 허용되고 있다.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대표적 예로는 한국투자신탁운용(주)가 설정한 한국베트남15-1유전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006년), 하나UBS자산운용(주)가 설정한 하나UBS암바토비니켈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2007년) 등이 있다. 그리고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대표적 예로는 한국산업은행, SK에너지(주) 및 맥쿼리삼천리자산운용(주)가 설립한 트로이카해외자원개발사모투자전문회사(2009년) 등이 있다.

3.2.2 해외건설특화펀드의 승인 시 고려사항

앞서 3.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건설특화펀드 역시 그 본질이 자본시장법상 펀드이므로, 그 설립 또는 설정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펀드 설립 또는 설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모 형태의 해외건설투자신탁 또는 해외건설투자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182조에서 정한 등록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금융위원회에 설정 또는 설립 등록을 하여야 하는바, 위 등록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한

다(자본시장법 제182조 참조).

또한 해외건설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제1항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고, 그 중 일부 사항 및 무한책임사원의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를 등기하여야 하고, 위 등기사항,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설립등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10, 동법 시행령 제271조의13 참조).

한편 사모 형태의 해외건설투자신탁이나 해외건설투자회사의 경우, 자본시장법 제249조의6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설정·설립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6 참조).⁷⁹⁾

다만 해촉법은 해외건설특화펀드의 등록 또는 보고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금융위원회는 해외건설특화펀드의 승인(등록, 보고)과 관련하여 제출받은 서류의 사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하여 그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을 미리 검토하게 하고 필요시 등록 또는 보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에 기속되지는 않으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흠결사항 보완 요청, 보고에 대한 수리 여부 결정 또는 등록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 결정 시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

79) 해촉법에서 명시적으로 ‘해외건설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해촉법에서 해외건설투자회사 및 해외건설투자신탁은 공모와 사모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 해촉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보고절차에 관한 자본시장법 제249조의6을 인용하여 이 경우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도록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투자회사나 투자신탁 형태의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일종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3 해외건설특화펀드 설립을 위한 협의 절차 검토

3.3.1 등록 또는 보고 시 사전 협의절차

해촉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또는 보고에 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촉법이나 해촉법 시행령에서 위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한데(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3조의3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있으나 동법 및 그 시행령에서도 협의의 의미에 관해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제도 도입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협의의 내용은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로 등록 또는 보고하려는 펀드가 해외건설사업에 투자하는 데 적합한지,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요건 이외에 자본시장법에 따른 일반적인 펀드의 설정내지 설립 요건에 대해서 보다 유연한 해석을 할 수 없는지와 같은 관점에 대해 살펴보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2015. 8. 11. 개정 해촉법에 따라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해외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조성·운용된 펀드의 경우,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사업에 특화된 투자 방식이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해촉법은 해외건설특화펀드의 설립 기타 운용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대출투자, 담보제공, 채무보증 및 자금차입 등이 가능하도록 정하였다.

위와 같은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토교통부는 금융위원회와의 협의 절차에서 설정 또는 설립 예정인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가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투자에 적합한지 그 밖의 요건 구비여부 판단 시 고려할 사항 등에 대해 적극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등록보고 시 협의절차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3.3.2 영업보고서 제출 관련

해촉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르면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는 영업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자본시장법 제90조가 집합투자업자로 하여금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도록 정한 것을 감안하여, 해외건설특화펀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도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3.4 해외건설특화펀드 운용역 교육 과정 검토

3.4.1 근거

해촉법 제19조의5 제1항은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만을 운용하는 전문집합투자업자 인가를 받기 위하여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이하 “**운용인력**”)을 확보할 것을 요구

하면서 투자운용인력의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해촉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자격요건을 구체화 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해외건설특화펀드의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교육지침**”)을 마련할 계획인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다.

3.4.2 목적 및 교육대상

교육지침 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5 및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사전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지침은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정책, 제도, 관련 법령과 투자전략과 회계처리, 사업성평가 및 사례분석, 리스크관리 등의 교육을 통하여 해외건설특화펀드의 운용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지침은 해촉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 사람(동 지침 상 “해외건설 등 관련인력”)을 교육대상자로 한다. 주로 건설공사 또는 엔지니어링활동과 관련한 실무 경력을 보유한 사람으로, 해외에서의 건설 및 엔지니어링에 관하여 이론 및 실습을 포함한 심화과정을 마치고, 특히 자산운용에 관하여 심도 있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해외건설사업에 대한 투자자

산 운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실무능력 및 노하우를 모두 갖춘 전문 인력을 배양하고자 한다.

3.4.3 교육기관

교육지침 제정안
<p>제4조(교육기관의 범위) ①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은 해외건설·금융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대학, 전문교육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금융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가 공동으로 설립한 단체 및 동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연구기관 2. 해외건설협회 및 동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연구기관 3.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및 동 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교육·연구기관 4. 기타 전문성, 교육·연구시설 등의 측면에서 위 기관들과 동등한 수준을 보유하였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p>제6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이 규정 제4조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지정여부를 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과정 및 교육비용의 적정성 2. 강사진 구성에 해외건설공사 및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관련 자산 및 유가증권의 투자·운용에 관한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이 충분히 포함되어 있을 것 3.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수급상황의 적정성 <p>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④ 제2항,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별표 제2호에 따른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교육기관 감독 및 지정취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교육담당자의 출석요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하게 한 경우
2. 이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지침에서는 원칙적으로 운용인력의 교육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할 기관에 대해서 개략적인 범위를 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관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일임하고 있다. 또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에 대해서도 별표 제2호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지침에 따르면 일단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교육기관이 해촉법 시행령에 따라 사전교육을 이수할 자격을 갖지 못한 자에게 사전교육을 이수하게 하거나 기타 교육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복수의 교육기관의 선정 가능성을 열어두어 교육기관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감독을 시행하며, 또 교육기관에 선정되기 위해서 최소한 갖추어야 할 인적·물적요건을 명문화함으로써, 해외건설 등 관련인력에 대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취지이다.

특히 자질이 우수한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양성을 위해서는 이들을 교육할 강사들의 인적요건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의 경우 교육의 초점이 자산운용보다는 자원개발의 측면에 맞춰져 있는 것과 달리, 교육지침에서는 교육기관의 인적요건으로 해외건설 관련 강사와 자산운용 관련 강사를 구분하여 각각에 해당하는 강사 각 1인 이상을 확보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해외건설산업에 대한 이해와 자산운용에 대한 이해의 균형을 이룰 수 있게 하고, 주로 해외건설 분야 경력자인 해외건설 등 관련인력들로 하여금 자산운용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지침 제정안
<p>[별표 제2호]</p> <p style="text-align: center;">교육기관의 인적·물적요건(제6조 관련)</p> <p>□ 인적요건</p> <p>교육기관은 아래와 같은 해외건설 관련 강사 1인 및 자산운용 관련 강사 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p> <p>가. 해외건설 관련 강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학, 토목공학, 조경학, 전기공학 등 건설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자로서 5년 이상 해외건설 또는 해외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직무분야의 기술사로서 3년 이상 또는 기사로서 10년 이상 해외건설 또는 해외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 3. 해외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공무원 4. 해외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임직원으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5. 해외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또는 공인 회계사
6. 해외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출연기관의 책임급 이상 연구원
7. 건축학, 토목공학, 조경학, 전기공학 등 해외건설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대학의 전임 교원 이상인 자
8. 금융기관에서 해외건설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나. 자산운용 관련 강사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금융기관,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와 유사한 외국의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을 포함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가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 또는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연금관리공단 등(이하 “집합투자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집합투자재산(이 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포함한다),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고유재산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을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업무(이하 “증권운용전문업무”라 한다)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경영학, 경제학 등 증권관계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금융위원회가 증권운용전문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p>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집합투자관계기관등에서 증권 운용전문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3. 공인회계사로서 집합투자관계기관등에서 증권운용전문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4. 금융투자업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금융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집합투자재산·신탁재산 또는 운용규모가 1,000억원 이상인 고유재산의 증권운용전문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p> <p>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 에 따른 투자운용인력(투자자산운용사)</p>

3.4.4 교육방법, 교육과정 및 이수기준 등

교육지침 제정안
<p>제5조(교육방법 및 교육과정 등) ①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교육 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한다.</p> <p>②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교육시간은 최소 60시간 이상으로 하 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제1호에 따른다.</p> <p>③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제1호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외건설업 시행 법인의 투자가치분석, 해외건설공사 및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평가 2.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해외건설 관련 정책·법률· 제도, 기타 금융투자 관련 규정 3. 투자전략·투자분석기법 및 리스크 관리 등 <p>④ 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별표 제1호의 기초과정, 해외건설 심화과정, 자산운용 심화과정을 출석률 80% 이상으로 수료한 후, 평가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하여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p>

⑤ 전항의 평가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들이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수급 및 기타 해외건설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정한다. 이때 교육기관들은 평가시험 문제의 출제를 위하여 별표 제2호의 인적요건에 해당하는 자들로 구성되는 출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교육과정은 기초과정, 해외건설 심화과정 및 자산운용심화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에 나타난 것과 같다.

교육지침 제정안 [별표]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시간
기초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건설관련 정책·법률·제도 ○ 자산운용관련 정책·법률·제도 ○ 해외건설사업 사업성평가 및 사례연구 	15시간
해외건설 심화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건설사업 참여 계약 실무(계약의 종류, 계약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사례연구 등) ○ 해외건설 투자전략 및 회계처리 ○ 해외건설업 시행 법인의 투자가치분석, ○ 해외건설사업 성공사례 및 실패사례 분석·세계 건설 및 엔지니어링 시장동향 	20시간
자산운용 심화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상품 및 세제 ○ 투자운용 전략 I ○ 투자운용 전략 II ○ 투자분석 ○ 리스크 관리 ○ 직무윤리 및 법규 	25시간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양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터넷 교육 과정 개설 등 예비운용인력의 편의를 고려하였고, 교육시간도 대부분의 예비운용인력이 직장인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너무 과중하지 않도록 정하였다.

수료기준은 기초과정, 해외건설 심화과정, 자산운용 심화과정을 출석률 80% 이상으로 수료한 후, 평가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득점하여 합격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3.4.5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관리

사전교육을 통해서 양성된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 및 사전교육 없이 해촉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해당 인력들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게 하였고, 특히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정하여, 해당 인력들의 전문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로 교육지침에 따르면, 사전교육을 이수받지 않고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으로 인정되는 자들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교육지침 제2조 제2호 참조).

교육지침 제정안
<p>제11조(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의 관리) ① 법 제19조의5제1항의 전문집합투자업자(이하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합니다) 또는 법 제19조의5조제2항의 일반집합투자업자(이하 “일반집합투자업자”라 합니다)는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p>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시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 인력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등록부에 기재하고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전문집합투자업자, 일반집합투자업자는 등록된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 인력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자산운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들은 그 이수한 날이 포함된 연도의 말일로부터 매 2년 이내에 교육기관으로부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들은 세계 건설 및 엔지니어링 시장동향, 투자운용 전략, 직무윤리 및 법규에 관한 내용을 토대로 3시간의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3.4.6 기대효과

교육을 통하여 해외건설사업 관련 투자운용업무에 특화된 운용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다양한 해외건설특화펀드의 개발 및 민간 자본의 해외건설 분야로의 유입이 활성화되고, 해외건설 관련 투자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이 증대되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건설사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임을 기대하여 볼 수 있다.

3.5 집합투자업자 인가 등 협의절차 검토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 인가를 받기 위하여는 운용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종류에 따라 20억원에서 80억원 이상의 최저자기자본금을 갖추어야 하며, 각 인가단위별로 필요한 전문운용인력을 갖추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2조 제2항 제4호 제229조, 동법 시행령 [별표1],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 그런데 해촉법 제19조의5 제1항에

서는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전문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그 하위 규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요건을 10억원 이상으로 하며, 전문운용인력으로서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해외건설촉진법
<p>제19조의5(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①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집합투자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요건을 10억원 이상으로 하며, 같은 법 제1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건설업에 관한 투자운용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p>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전문집합투자업자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으며, 위와 같이 해촉법 제19조의5 제1항에 의한 전문집합투자업자의 경우도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로서 인가를 받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금 및 전문투자운용인력 등 해촉법에서 특별히 정한 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에 관하여서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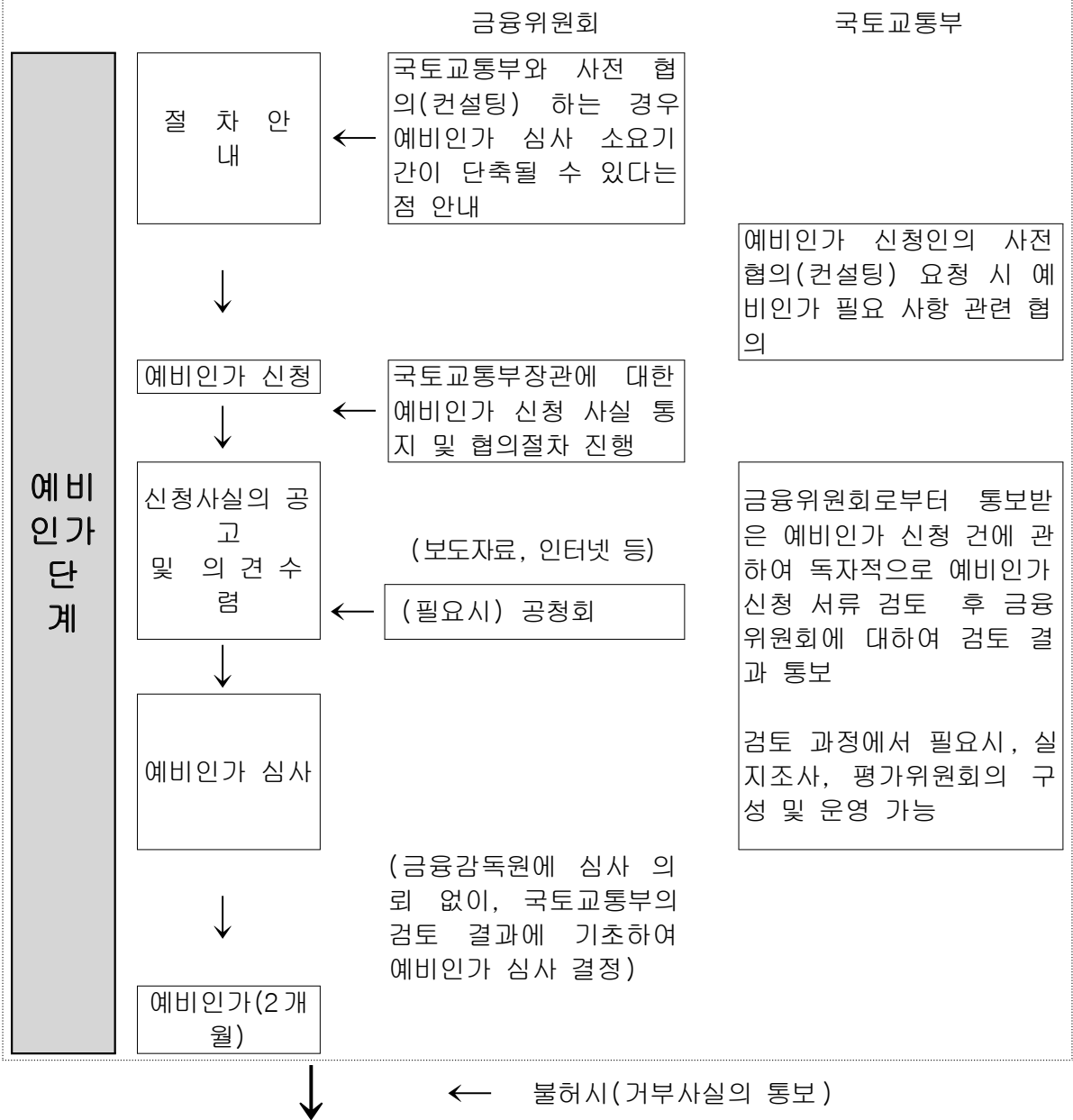
다만, 운용인력의 경우, 위 3.3 및 3.4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및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교육기관에서 운용인력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전문집합투자업자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인적 요건 충족을 위하여 먼저 해촉법 제19조의5 제1항, 해촉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교육지침에 따라 해외건설 투자운용인력으로 인증 받은 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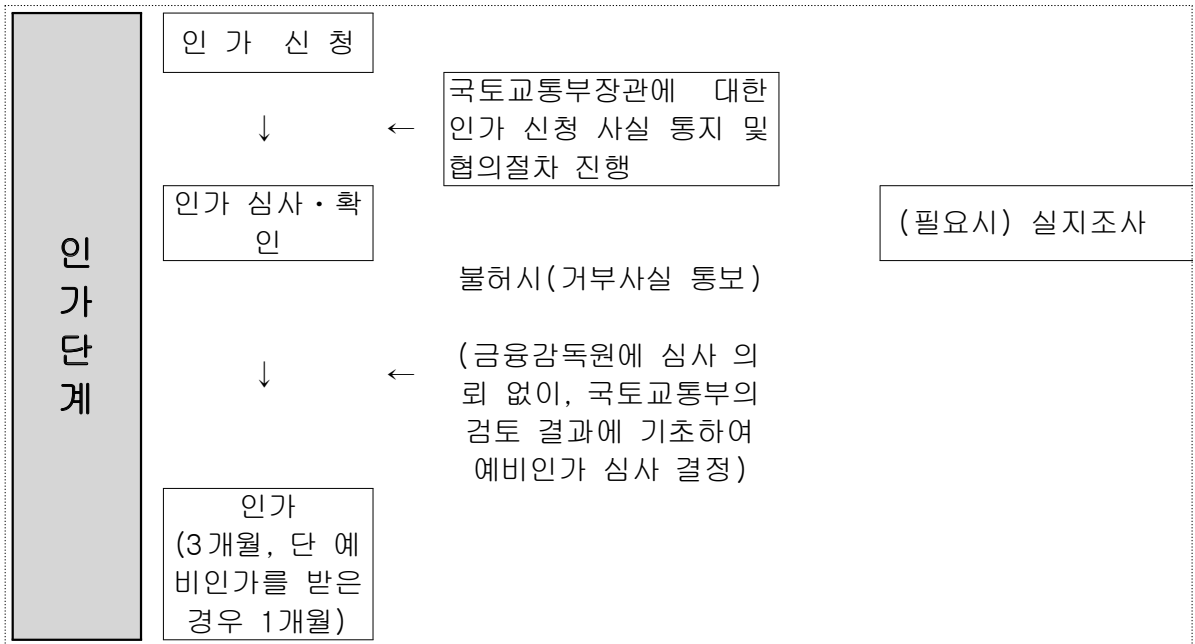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평가 시험에 합격한 운용인력에게 교육이수증을 수여하고, 이수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 전문투자운용인력 등록부를 관리함으로써, 해당 운용인력이 전문투자업자 인가를 위한 인적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확인 및 증빙에 관하여 인가 신청자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인가 여부를 심사하는 금융감독원에서도 인가를 신청한 업종이 해외건설투자회사 또는 해외건설투자신탁의 자산만을 운용하기 위한 전문집합투자업자라는 점을 심사 시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및 해외건설전문 투자운용인력 교육기관의 운용인력 교육 및 인증 관련 담당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해외건설특화펀드 및 전문집합투자업자 관련 제도를 마련한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문집합투자업자 인가와 관련하여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 전문집합투자업자 인가매뉴얼’(안)을 마련하고 있는바 위 매뉴얼안에 따르면 전문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인가절차는 아래 표와 같은 절차에 따라 행하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인가절차 흐름도





참고문헌

- “건설업계 구조조종에 따른 건설노동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연구”, 윤
종식, 2014. 1. 3.
-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 관계부처합동, 2011. 5. 1.
-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 교과과정 및 인증기준 개발 연구”, 해외건설
협회, 2014. 12.
- “임금채불 사업주 정부공사 입찰 불이익 준다.”, 건설경제신문, 2015. 2. 22.
자 기사,
- “해외건설공사 사업성평가 분석 강화 방안 연구”, 해외건설협회, 2013. 4.
1.
- “호주 금융시스템의 특징 및 시사점”,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2015. 3. 18.
- “해외건설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연구”, 국토교통부, 2012. 1. 23.
- “해외 주요 공적연금의 자산배분 및 운용전술 비교”, 원종욱, 손지훈,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2015
- “해외건설 일자리 창출 추이 분석과 전망”, 김길주,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
2014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http://www.icak.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한국은행, 2014년 지역별·통화별 국제투자대조표(잠정)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통계시스템 (<http://freesis.kofia.or.kr/>)

국토교통부, 건설/해외정책, (<http://www.molit.go.kr/>)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http://www.customs.go.kr/>)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http://www.seibro.or.kr/>)

부동산114 (<http://www.r114.com/>)

일본 재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go.jp/english>)

21015년 2분기말 국민연금 기금운용 세부내역

2014년 국민연금 기금운용 연차보고서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

국민연금 보도설명자료, ‘국민연금, 해외투자 위탁업체에 수수료 퍼주기 논란(10.5 연합뉴스 등) 관련’

금융투자협회